

자료 DSP 제 2002 - 4 - 88 호

## 제1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

---

###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과 향후 방향

---

---

- 일 시 : 2002. 11. 1(금) 14 : 00 ~ 17 : 30
- 장 소 :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대강당
- 주 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후 원 : 교육인적자원부·연세대학교·K-TV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DSP 제 2002 - 4 - 88 호

## 제1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

---

###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과 향후 방향

---

---

- 일 시 : 2002. 11. 1(금) 13 : 30 ~ 17 : 30
- 장 소 :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회의실
- 주 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후 원 : 연세대학교·교육인적자원부·K-TV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일 정 표

시 간	내 용
13:30 ~ 14:00	· 등 록
14:00 ~ 14:10	· 개회식
14:10 ~ 14:40	<p style="text-align: right;">사회: 이광자(서울여자대학교 총장)</p> · 주제발표 I :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계획 주요사항과 과제 이 현 청(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14:40 ~ 15:10	토 론 김조영(잠실고등학교 교장, 서울 국공립고등학교장회 회장) 이걸우(교육부 학술학사지원과장) 이기태(경희대학교 입시관리처장)
15:10 ~ 15:30	· 휴 식
15:30 ~ 16:00	· 주제발표 II : 2005학년도 대입전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과제 이 상 갑(경북고 교장, 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16:00 ~ 16:30	토 론 박흥기(대한매일신문 사회교육팀 차장) 황인표(서울 보성고등학교 교사, 교총 전문위원) 김진기(전북대학교 교무연구처장)
16:30 ~ 17:20	· 종합토론 <p style="text-align: right;">사 회 : 박용수(강원대학교 총장)</p>
17:30	· 폐 회

## 목 차

### <주제발표 I>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과 과제 .....	3
I. 서    론 .....	3
II. 2005학년도 대입전형의 주요 특징 .....	4
III. 2005학년도 대학입시전형계획의 과제 .....	22
IV. 결    론 .....	25

<토론 I -1> .....	9
-----------------	---

<토론 I -2> .....	9
-----------------	---

<토론 I -3> .....	4
-----------------	---

### <주제발표 II>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제도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과제 ..	51
1. 2005학년도 대입전형 제도의 경향 .....	52
2. 당면과제 .....	55
3.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실제 .....	57
4.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	62
5. 제언 및 결론 .....	67

<토론 II -1> .....	7
------------------	---

<토론 II -2> .....	7
------------------	---

<토론 II -3> .....	9
------------------	---

---

---

# 주 제 발 표 I

---

---

〈주제발표 I〉

##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과 과제

이 현 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I. 서 론

우리나라의 대학입시계획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온 지 오래이다. 특히 입시와 직접 관련된 학부모나 수험생, 그리고 지도교사 등에게도 큰 관심이 있었음은 물론, 고등학교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그동안 수많은 대학입학제도의 틀의 변화가 있어 왔고, 근자에는 21세기에 부합되는 다양한 잠재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국·영·수 위주의 학력중심선발체제를 지양하기 위한 2002학년도 새로운 입시 틀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2005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의 7차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새로운 대입전형의 틀이 도입될 예정이다. 해방이후 이러한 대학입시체제의 변화는 크게는 15번 세부적으로는 36번이나 바뀌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대학입시가 교육정상화를 위한 관건이었음을 반증하는 예이기도 하다.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은 새로 도입된 7차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입학전형의 틀로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소위 내신성적으로 반영하고, 선택교육과정으로 설정된 고등학교 2-3학년의

교과목은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는 학생의 특기, 적성, 흥미에 따라 고등학교 2-3학년에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능력시험에서도 영역이나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게 됨으로써 대학입시에서도 모집단위의 전공특성에 따라 응시자들의 선택형 이수교과목이나 수학능력시험 점수를 반영하게 된다. 그러므로 2005학년도의 대학입학전형은 수험생의 다양한 선택과 대학의 다양한 선발이 그 기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학전형의 기초 위에 지금까지 시행해왔던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영역의 반영은 물론 대학에 따라서는 면접, 논술고사,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 기존의 전형방법이나 전형요소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특징은 그동안 대학입학전형의 틀이 많이 바뀌어 왔지만 국·영·수 위주의 성적중심에서 잠재적 능력과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II. 2005학년도 대입전형의 주요 특징

2005학년도 대입전형은 7차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마디로 2002학년도의 입학전형 틀을 견지하되 7차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의 국민공통교과인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등 10개 교과로 구성되어 있고, 2-3학년에서 이수하게 되는 선택교과목의 경우 일반선택과목 26교과, 심화선택과목 53교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지정한 교과를 이수하고, 68단위 정도는 학생이 선택해서 교과를 이수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특히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의 직접적인 출제범위 역시 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교과와 관련되어 있다.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큰 특징들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과 학생부 활용 현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2005학년도 대입전형의 일반적 경향

2005학년도 대입전형의 일반적 경향은 현행 2002학년도 및 2003학년도와 같이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및 정시모집이 실시되며, 전형유형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이 실시된다. 또한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며, 논술 이외의 필답고사가 금지되고, 고등학교간 성취수준의 격차를 감안하여 차등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005학년도 대입전형의 체제는 한마디로 현행의 입시체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선택형중심 7차 교육과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능체제가 달라지고, 학생부 반영방법 등이 달라진다.

우선 모집시기별 대입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을 살펴보면, 수시 1학기 모집을 시행하는 대학은 75개교로 2003학년도보다 9개교가 증가하고, 수시 2학기 모집 대학은 167개교로 2003학년도보다 1개교가 증가하고, 정시 모집대학은 192개교로 변화가 없다.

수능성적은 수시 1학기 모집에서 전형요소로서 활용되지 않으며, 수시 2학기 모집에는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성적보다는 학생부 및 비교과 영역의 활동들과 대학별 면접 등의 고사가 중요한 요소로 활용된다. 특히 수시모집은 대학이 입학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학생의 특기, 적성, 여건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등의 모집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특징은 현 입시체제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시모집에서 수능성적을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대학은 4년제 대입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전체의 98%인 189개 대학에 이르고, 수능성적을 전



혀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3개 대학이 있다. 일부 모집단위에서 수능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은 12개 대학이 있다. 따라서 수시 1학기에는 수능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수시 2학기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의 46%인 77개 대학이 수능성적을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며, 정시모집에서는 98%의 대학이 수능성적을 활용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모든 모집시기에 있어서 전형요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학생부의 교과성적은 수시 1학기에서 96%인 72개 대학, 수시 2학기에서 99%인 166개 대학, 정시모집에서 99%인 190개 대학이 반영하여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부 교과성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할 수 있다. 교과영역보다 반영대학의 비율이 적기는 하지만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을 수시 1학기에서 75%인 56개 대학, 수시 2학기에서 74%인 124개 대학, 정시모집에서 80%인 154개 대학이 반영한다. 모든 모집시기에 걸쳐 70% 이상의 대학이 특별활동, 봉사활동, 출결사항, 창의적 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반영함으로써 7차 교육과정이 원만히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면접, 논술 등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하여 반영하는 대학은 수시 1학기에서는 72%인 54개교이고, 수시2학기에서는 77%인 129개교, 정시에서는 79%인 154개교이다.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을 반영하는 대학은 수시 1학기에서는 40%인 30개교이고, 수시 2학기에서는 44%인 73개교, 정시에서는 20%인 39개교 등으로 성적 이외의 학생 소질과 적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는 현행 대입제도의 기본방향이 일관성 있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택형 교육과정인 7차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현행보다는 보다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여 입학생을 선발하려는 경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을 반영한 첫 입학전형이라는 점 때문에 대폭적인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2002 및 2003학년도 입학전형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7차 교육과정을 점진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표-1> 참조).

〈표-1〉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 사항

모집시기	수학능력 시험성적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고사 (면접, 논술 등)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	기타 자료
		교과영역	비교과영역			
수시 1학기	-	96	75	72	40	36
수시 2학기	46	99	74	77	44	47
정 시	98	99	80	79	20	16

## 2. 대학입학수학능력

2005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의 직접적인 출제범위는 고등학교 2-3학년에서 이수하게 되는 선택교과과목이다. 물론 각 영역도 선택이 가능하고, 수리영역과 탐구영역의 경우에는 교과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언어와 외국어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지만 수리영역의 경우에는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되어 있고 사회, 과학, 직업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탐구영역의 경우에도 사회탐구 중 택4, 과학탐구 중 택4, 직업탐구 중 택3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제2외국어나 한문의 경우, 8개 과목 중 1개를 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체제는 언어영역, 외국어 영역, 그리고 수리영역에다 선택형 탐구영역을 추가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필수화되어 있는 현 수능체제와는 달리 수험생이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5학년도 대입수능체제는 <표-2>에 제시되어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은 <표-3>에 제시되어 있듯이 2005학년도의 대학 입학수학능력시험체제는 7차 교육과정의 특성대로 「선택형 수능」의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다.

〈표-2〉 2005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체제

평가영역		출제범위에 직접 포함되는 교과목	
언어		현행과 동일(국어교육의 목표를 중심으로 한 시험으로서 특정한 교과목을 상정하지 않으며, 범교과적인 제재를 활용하여 측정)	
외국어(영어)		현행과 동일(영어교육의 목표를 중심으로 한 시험으로 특정한 영어교과목에 제한하지 않고 범교과적인 제재를 활용하여 측정)	
수리	선택	‘가’형	수학 I, 수학II+(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중 택1)
		‘나’형	수학 I
사회/ 과학/ 직업 탐구	선택	사회탐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근·현대사, 국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윤리(윤리와 사상, 전통윤리) 중 택4
		과학탐구	물리 I, 물리II, 화학 I, 화학II, 생물 I, 생물II, 지구과학 I, 지구과학II 중 택4
		직업탐구	17 교과목 중 택3
제2외국어/한문		제2외국어 I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7개 과목 또는 한문의 총8개 과목 중 택1	

〈표-3〉 일반계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

구 분		국민 공통교과	선택과목	
			일반선택과목	심화선택
교 과	국어 도덕 사회	국어(8) 도덕(2) 사회(10) (국사4)	국어생활(4) 시민윤리(40) 인간사회와 환경(4)	화법(4),독서(8),작문(8),문법(4),문학(8) 윤리와 사상(4), 전통윤리(4) 한국지리(8), 세계지리(8), 경제지리(6) 한국근·현대사(8),세계사(8),정치(8) 법과 사회(6),경제(6),사회·문화(8)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수학(8) 과학(6) 기술· 가정(6)	실용수학(4) 생활과 과학(4) 정보사회와 컴퓨터(4)	수학 I (8),수학II(8),미분과 적분(4), 확률과 통계(4),이산수학(4) 물 I (4),물 II(6),화 I (4),화II(6) 생 I (4),생 II(6),지 I (4),지 II(6) 농업과학(6),공업기술(6),기업경영(6),해 양과학(6),가정과학(6)
	체육 음악 미술	체육(4) 음악(2) 미술(2)	체육과 건강(4) 음악과 생활(4) 미술과 생활(4)	체육이론(4),체육실기(4 이상) 음악이론(4),음악실기(4 이상) 미술이론(4),미술실기(4 이상)
	외국어	영어(8)		영 I (8),영 II(8), 영어독해(8) 영어회화(8),영어작문(8)
			독 I (6),프 I (6),스 I (6), 중 I (6),일 I (6),러 I (6), 아 I (6)	독 II(6),프 II(6),스 II(6),중 II(6),일 II(6), 러 II(6),아II(6)
	한문 교련 교양		한문(6), 교련(6), 철학(4),논리학(4),심리 학(4),교육학(4),생활경 제(4),종교(4),생태와 환경(4), 진로와 직업(4),기타(4)	한문고전(6)
	56단위 (10교과)	24단위 이상 (26교과)	112단위 이하(53교과)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의 일반적 특징 중 눈여겨볼 부분은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영역 중 하나만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다는 점과 현행 수능보다는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0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대학의 수능 반영현황을 보면 전체대학의 44.1%에 해당되는 85개 대학이 4개 영역을 반영

하고 있고, 37.0%인 71개 대학이 3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5.6%인 10개 대학에 이르고, 0.7%인 1개 대학이 1개 영역을, 12.6%인 24개 대학이 2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81.1%인 대다수의 대학이 수능영역 중 '3+1' 혹은 '2+1'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학습부담률이 높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2002학년도나 2003학년도의 현 체제에 비해 학습부담률이 실제로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교과만을 범위로 출제하고 탐구영역은 1개 영역만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학에서 수학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언어, 수리, 외국어 등의 기초실력을 검증하기 위해 3+1체제나 2+1체제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고등학교 1학년도에서 이수하게 되는 10교과 56단위의 국민공통교과가 모두 내신으로 반영되게 됨으로써 다소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영역을 준비하게 된다면 오히려 학습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대학수학능력시험반영계획의 주요 경향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4〉 2005학년도 정시 대학수학능력시험반영실태

반영대학수													
계 열	언어	외국어 (영어)	수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 어 및 한문
			가	나	가/나	사회	과학	직업	사회/ 과학	과학/ 직업	사회/ 직업	사회/과 학/직업	
인문사회	164	166	0	16	87	33	2	0	25	1	8	108	35
자연과학	78	124	31	2	100	1	36	0	21	8	1	76	7
공 학	73	121	24	1	104	1	24	0	9	9	0	78	7
예 체 능	139	132	0	6	59	15	3	0	20	0	5	92	13
의 학	33	47	26	1	23	0	27	0	8	2	0	9	1
기 타	26	24	2	0	20	0	2	1	4	0	1	19	0
전 체	185	186	41	17	155	34	46	1	38	11	8	132	37

<표-4>에서 볼 수 있듯이 정시모집의 경우 언어는 전체의 96%인 185개교가, 외국어(영어)는 97%인 186개교가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수리영역은 ‘가’형이나 ‘나’형 혹은 ‘가/나’형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가’형은 21%인 41개교, ‘나’형은 9%인 17개교, ‘가/나’형은 80%인 155개교가 각각 이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사회, 과학, 직업 탐구영역의 경우에는 17%인 34개교가 사회영역을 반영하고 있고, 23%인 46개교가 과학영역을 반영하고 있다. 직업영역은 0.5%인 1개교, 그리고 사회/과학영역의 경우에는 19%인 38개교, 과학/직업영역은 6%인 11개교, 사회/직업영역은 4%인 8개교, 사회/과학/직업영역은 67%인 132개교가 각각 이를 반영하고 있다.

제2외국어 및 한문영역 반영대학은 19%인 35개교이다. 이러한 경향을 보면 2005학년도에도 절대 다수의 대학들이 수학능력시험성적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대학의 입시전형 전략에 따라 다양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시 2학기의 경우 전반적인 수능 반영계획을 영역별로 보면, 언어영역은 전체의 44%인 74개교가, 외국어(영어)영역은 45%인 76개교가 이를 반영한다. 수리 영역 중 ‘가’형은 17%인 29개교, ‘나’형은 7%인 11개교, ‘가/나’형은 38%인 64개교가 각각 이를 반영한다.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중 사회영역은 7%인 12개교, 과학영역은 14%인 24개교, 직업영역은 1%인 1개교, 사회/과학영역은 10%인 17개교, 과학/직업영역은 4%인 6개교, 사회/직업영역은 3%인 5개교, 사회/과학/직업영역은 21%인 36개교가 각각 이를 반영하고, 제2외국어 및 한문영역 반영 대학은 6%인 10개교이다.

이러한 경향은 정시와는 다소 다른 수치를 나타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열별로 수능영역 반영 경향은 같다고 보여진다. 정시모집과 수시 2학기에서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계획의 세부경향을 요약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언어영역 반영 대학을 모집단위 계열별로 보면, 수시 2학기의 경우 의학 50%, 인문사회 44% 등으로 비교적 높고, 공학 계열은 19%에 불과하다. 정시에서는 예체능 97%, 인문사회 96% 등으로 매우 높고, 공학은 56%로 낮아 계열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② 외국어(영어) 영역 반영 대학을 모집단위 계열별로 보면, 수시 2차의 경우 의학 81%, 자연과학 52%, 인문사회 44%, 예체능 30% 등으로, 인문사회 계열이 의학이나 자연과학 계열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정시에서는 의학 100%를 비롯하여 예체능이 91%에 달할 정도로 계열간 편차도 적으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어를 반영하려는 대학이 매우 많다.

③ 수리 영역 반영 대학을 모집단위 계열별로 보면, 수시 2학기의 경우 ‘가’형이나 ‘나’형을 특징하는 경우보다 ‘가/나’형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다. ‘가’형을 요구하는 대학은 의학이 50%인 반면 인문사회와 예체능은 한 곳도 없다. ‘나’형만을 택한 대학은 자연과학과 공학이 한 곳도 없는 것을 비롯하여, 가장 높은 인문사회도 6%에 불과하다. ‘가/나’ 혼합형을 요구하는 대학은 자연과학 41%, 의학 36%, 공학 33% 등으로 높고, 예체능은 12%에 그치고 있다. 정시에서는 ‘가’형을 요구하는 대학이 의학은 55%로 높고 자연과학 24%, 공학 19%이며, 인문사회와 예체능은 한 곳도 없다. ‘나’형을 요구하는 대학은 수시 2학기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인문사회가 9%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가/나’형을 요구하는 대학은 공학 81%, 자연과학 79% 등이 높고, 의학은 49%, 예체능은 41%로 낮고 편차도 큰 편이다.

④ 탐구영역에서는 사회, 과학, 직업 탐구영역을 개별 요소로 하여 다양한 조합의 선택이 가능하다. 먼저 수시 2학기의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탐구영역 반영 대학이 많지 않다. 특히 직업을 단독으로 요구하거나 다른 요소와 혼합하는 경우 모두 낮은 반영율을 보인다. 사회만을 요구하는 대학도 전반적으로 많지 않아 가장 높은 인문사회 계열이 8%에 불과하고 자연과학, 공학, 의학

계열에서는 한 곳도 없다. 사회/과학 혼합을 요구하는 대학은 5%~8% 수준이고, 수시 2학기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회/과학/직업을 요구하는 대학이 의학 계열 최저 11%이고 최고인 인문사회와 자연과학이 18% 등으로 편차도 크지 않다.

⑤ 정시에서의 탐구영역 반영 현황에서도, 사회, 과학, 직업 등 개별 영역을 요구하기보다는 사회/과학/직업 혼합 영역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과학 탐구 영역에서는 계열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데 의학이 57%로 높고 자연과학은 27%, 공학은 18%인 반면, 인문사회는 1%, 예체능은 2%로 매우 낮고, 계열간 편차도 크다.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과학/직업 영역을 요구하는 대학이 인문사회와 예체능이 63%로 가장 높고 의학이 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⑥ 제2외국어 및 한문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을 계열별로 보면, 수시 2학기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아 의학 계열은 한 곳도 없고, 가장 높은 인문사회 계열도 6%에 불과하다. 정시에서는 역시 가장 낮은 의학이 2%, 가장 높은 인문사회가 20% 수준으로 수시 2학기보다는 높지만 전반적으로 낮다.

특히 탐구영역선택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영역에서 요구하는 과목수의 과다는 학생들의 시험준비와 대학 및 전공선택의 범위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과 관련지어볼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탐구영역의 주요 세부경향을 보면,

① 정시 모집의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75개교가 2과목을 요구하고, 49개교는 1과목을, 32개교는 4과목을, 18개교는 3과목을 각각 요구한다. 여기서도 가장 빈도수가 많은 2과목 요구 대학을 계열별로 보면, 인문사회 57개교, 자연과학 55개교 등으로 다수를 차지하나, 의학 계열은 22개교에 불과하다.

② 정시 모집의 직업탐구 영역에서는 57개교가 2과목을 요구하고, 47개교는



1과목을, 25개교는 3과목을 각각 요구한다.

③ 수능의 사회탐구 영역 과목 선택 또는 지정 반영 대학을 보면, 정시 모집의 경우 거의 편차 없이 90%인 173개 대학이 정치, 사회문화, 윤리 과목을, 89%인 172개교가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국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법과사회, 경제 과목을 각각 반영한다.

④ 수능의 과학탐구 영역 과목 선택 또는 지정 반영 대학을 보면, 정시 모집의 경우 역시 88%인 170개교가 물리I, 물리II를, 88%인 169개교가 화학I, 생물I, 화학II, 생물II를, 87%인 167개교가 지구과학I을, 86%인 166개교가 지구과학II를 각각 거의 편차없이 골고루 반영한다.

⑤ 수능의 직업탐구 영역 과목 선택 또는 지정 반영 대학을 보면, 정시 모집의 경우 69%인 134개교가 정보기술기초, 컴퓨터 일반, 수산해운정보처리, 프로그래밍을, 68%인 132-133개교가 농업정보관리, 공업입문, 기초제도, 상업경제, 회계원리, 해양일반, 수산 일반, 해사 일반, 인간발달, 식품과 영양, 디자인 일반을, 67%인 131개교가 농업이해, 농업기초기술을 각각 거의 편차 없이 골고루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1>에서 보면 정시모집의 경우 사회탐구영역에서는 74개교가 2과목을 요구하고, 49개교는 1과목을, 32개교는 4과목을 17개교는 3과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물론 2과목 요구 대학을 계열별로 보면 인문사회계열이 69개교로 가장 많고 이어 예체능 52개교, 자연과학 44개교 등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4-2>에서 볼 수 있듯이 인문사회의 경우 사회탐구 반영비율 대학이 89%에 이르고, 자연과학의 경우 79%의 대학에서 선택 또는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공학은 전체의 64%의 대학에서, 예체능은 전체의 83%의 대학에서, 의학은 38%의 대학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4-2>에서 나타난 사회탐구나 <표-4-3>에서 나타난 과학영역과목, 그리고 <표-4-5>에 나타난 직업탐구영역과목에서도 반영대

학 비율이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직업탐구영역의 경우에는 선택 또는 지정 반영하는 대학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1〉 탐구영역 반영현황 (정시)

계 열	사회탐구영역				과학탐구영역				직업탐구영역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1과목	2과목	3과목
인문사회	40	69	13	25	38	57	7	12	40	51	13
자연과학	30	44	6	9	33	55	10	18	32	38	10
공 학	31	40	3	5	31	51	8	17	33	39	10
예 체 능	39	52	10	17	38	46	5	12	39	43	7
의 학	2	13	2	2	3	22	8	12	1	8	2
기 타	4	13	2	5	4	13	2	5	4	11	6
전 체	49	74	17	32	49	75	18	32	47	57	25

〈표-4-2〉 사회탐구 영역 과목 선택 또는 지정 반영대학

계 열	반영대학 수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국사	한국근 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윤리
인문사회	152 (80)	152 (89)	152	152	152	152	152	153	152	153	153 (89)
자연과학	89 (70)	89 (78)	89	89	89	89	89	89	89	89	89 (70)
공 학	82 (64)	82 (64)	82	82	82	82	82	82	82	82	82 (64)
예 체 능	121 (83)	120 (83)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1	121 (83)
의 학	18 (38)	18 (38)	18	18	18	18	18	18	18	18	18 (38)
기 타	24 (92)	24 (92)	24	24	24	24	24	24	24	24	24 (92)
전 체	172 (82)	172 (89)	172 (89)	172 (89)	172 (89)	172 (89)	172 (89)	173 (90)	172 (89)	173 (90)	173 (90)

\* 괄호안은 반영대학 백분율 비율임, 세계지리 등 과목의 반영 비율은 동일함.

〈표-4-3〉 과학탐구 영역 과목 선택 또는 지정 반영대학

반영대학 수								
계 열	물리I	화학I	생물I	지구과학I	물리II	화학II	생물II	지구과학II
인문사회	124 (72)	124 (72)	124 (72)	124 (72)	123 (71)	123 (71)	123 (71)	123 (71)
자연과학	117 (93)	116 (92)	116 (92)	115 (91)	116 (92)	115 (91)	115 (91)	114 (90)
공 학	112 (88)	112 (88)	112 (88)	110 (86)	112 (88)	112 (88)	112 (88)	110 (86)
예체능	108 (74)	108 (74)	108 (74)	108 (74)	107 (73)	107 (73)	107 (73)	107 (73)
의 학	42 (89)	43 (91)	43 (91)	41 (87)	43 (91)	44 (94)	44 (94)	42 (89)
기 타	24 (92)	24 (92)	24 (92)	24 (92)	24 (92)	24 (92)	24 (92)	24 (92)
전 체	170 (88)	169 (88)	169 (88)	167 (87)	170 (88)	169 (88)	169 (88)	166 (86)

\*괄호안은 반영대학 백분율 비율임

〈표-4-4〉 직업탐구 영역 과목 선택 또는 지정 반영대학

반영대학 수																	
계 열	농업정보관리	정보기술기초	컴퓨터일반	수해정보처리	농업이해	농업기초기술	공업입문	기초제도	상업경제	회계원리	해양일반	수산일반	해사일반	인간발달	식품과영양	디자인일반	프로그래밍
인문사회	111	110	111	110	110	110	109	109	111	111	109	109	109	110	110	110	109
자연과학	82	81	82	81	81	81	80	80	80	80	80	80	80	81	81	82	81
공 학	83	84	83	84	82	82	84	84	82	82	83	83	83	82	82	82	84
예 체 능	93	93	93	93	93	93	93	93	93	93	93	93	93	93	93	93	93
의 학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기 타	19	20	20	20	19	19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전 체	133	134	134	134	131	131	133	133	133	133	132	132	132	132	132	133	134

〈표-4-5〉 정시모집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과목 반영 대학의 비율(%)

반영대학 비율(%)																	
계 열	농 업 정 보 관 리	정 보 기 술 기 초	컴 퓨 터 일 반	수 산 해 운 정 보 처 리	농 업 이 해	농 업 기 초 기 술	공 업 입 문	기 초 제 도	상 업 경 제	회 계 원 리	해 양 일 반	수 산 일 반	해 사 일 반	인 간 발 달	식 품 과 영 양	디 자 인 일 반	프 로 그 래 밍
인문사회	65	64	65	64	64	64	63	63	65	65	63	63	63	64	64	64	63
자연과학	64	63	64	63	63	63	62	62	62	62	62	62	62	63	63	64	63
공 학	64	65	64	65	63	63	65	65	63	63	64	64	64	63	63	63	65
예 체 능	63	63	63	63	63	63	63	63	63	63	63	63	63	63	63	63	63
의 학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기 타	73	77	77	77	73	73	77	77	77	77	77	77	77	77	77	77	77
전 체	68	69	69	69	67	67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69

<표-4-2>에서부터 <표-4-5>에 제시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탐구 영역과목선택에서 과목간의 선호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대학들이 특정과목을 지정하지 않고 전체과목에서 어느 과목이든 선택 가능하도록 하여 일정 개수의 과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2외국어 및 한문영역과목의 경우에 선택 또는 지정 반영하는 대학을 보면 정시모집의 경우 38개교는 중국어를, 37개교는 일본어와 한문을, 35개교는 독어와 프랑스어를, 34개교는 러시아어를, 31개교는 스페인어와 아랍어과목을 반영하여 제2외국어와 한문영역 과목을 고루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계열별로 볼 때 인문사회가 30여개, 예체능이 12개, 자연과학과 공학이 6개 대학 등으로 나타난 반면 의학은 1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3. 학교생활기록부

2005학년도 입학전형에서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은 학교생활기록부로 반영되기 때문에 고등학교1학년까지 이수하게 되어 있는 국민공통교육과정 또한 2-3학년의 수능직접반영 교과목과 더불어 고등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학입시에 치중되어 있는 고등학교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내신 성적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중점과목에 대한 학습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은 수시1학기, 수시2학기 및 정시모집에서 대학이 선택 또는 지정하여 반영하게 된다. 대학에서 반영하는 비율을 과목별로 보면 <표-5>에서 나타나 있듯이 국어 95-98%, 영어 92-95%, 수학 89-92%, 사회(국사) 87-90%, 과학 82-87% 등으로 높이 반영되고 있고 도덕, 기술·가정, 음악, 체육, 미술 등의 과목도 50-70% 수준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정시모집의 경우, 국어는 인문사회와 예체능계열에서 96%와 95%로 높게 반영되고 있고, 영어는 의학98%, 공학 96%, 자연과학과 인문사회 95% 등으로 높게 나타나 있다. 수학의 경우는 의학 98%, 공학 97%, 자연과학 96%로 나타나 이공계계열의 많은 대학들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회는 인문사회의 90%가 반영하고 있고, 과학은 의학계열 98%와 자연과학과 공학에서 90%를 반영함으로써 모집계열에 따라 반영과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전형요소활용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표-5>과 같다.

〈표-5〉학교생활기록부의 전형요소활용 현황

계열	국어	도덕	사회 (국사)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영어	체육	음악	미술
인문사회	96	69	90	81	70	65	95	56	57	57
자연과학	89	61	73	96	90	64	95	52	52	52
공 학	89	63	74	97	90	67	96	56	56	57
예 체 능	95	65	85	74	69	63	91	64	63	65
의 학	87	55	74	98	98	55	98	47	47	47
기 타	100	98	96	96	85	81	100	77	77	77
전 체	96	70	90	92	87	68	95	65	65	66

학교생활기록부의 전형요소활용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수시1학기 모집에서 국민공통교육과정 중 과목을 선택 또는 지정 반영하는 현황을 과목별로 보면, 국어 95%, 영어 92%, 수학 89%, 사회(국사) 88%, 과학 84% 등으로 높은 반영률을 보이고, 도덕과 기술·가정이 각각 65%로 중간 정도, 그리고 미술, 체육, 음악 등은 각각 50%대의 반영률을 보여준다.

② 수시2학기 모집에서 국민공통교육과정 중 과목을 선택 또는 지정하여 반영하는 현황을 과목별로 보면, 국어 98%, 영어 95%, 수학 92%, 사회(국사) 87%, 과학 82% 등으로 역시 높은 반영률을 보이고, 나머지 도덕, 기술·가정, 체육, 미술, 음악 등은 60% 내외의 비교적 낮은 반영률을 나타낸다.

③ 정시모집에서 국민공통교육과정 중 과목을 선택 또는 지정하여 반영하는 현황을 과목별로 보면, 국어 96%, 영어 95%, 수학 92%, 사회(국사) 90%, 과학 87% 등 수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다수 대학이 이들 과목을 비중있게 반영하지만, 나머지 도덕, 기술·가정, 미술, 음악, 체육 등의 과목도 60-70% 수준의 반영률을 보인다.

④ 정시모집의 국민공통교육과정에서 활용도가 높은 과목을 모집 계열별로

보면, 국어의 경우 인문사회와 예체능 계열에서는 96%와 95%로 높고 의학 계열에서는 87%로 낮으며, 영어는 반대로 의학 98%, 공학 96%, 자연과학과 인문사회 95% 등으로 높고 예체능은 91%로 낮다. 수학은 의학 98%, 공학 97%, 자연과학 96%로 높으며 예체능 74%로 낮고, 사회는 인문사회 90%로 높으며, 공학과 의학이 74%, 자연과학 73%로 낮다. 과학은 의학 계열 98%를 비롯하여 자연과학과 공학이 각각 90%로 높고 인문 사회 70%, 예체능 69%로 낮게 나타났다.

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수시1학기에서는 54개 대학 (72.0%), 수시2학기에서는 117개 대학(70.0%), 정시에서는 143개 대학(74.4%)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2-3학년에서 이수하게 되는 선택교과과정의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들은 수시 1학기에서 전과목반영대학이 17개교, 일부교과 반영대학이 55개교로 나타나 있고, 수시2학기의 경우도 전교과 반영대학이 30개교, 일부교과 반영대학이 136개교에 이른다. 정시의 경우에는 전교과 반영대학이 48개교이고, 일부교과 반영대학이 143개교로 나타나 있다.

선택교육과정 중 과목을 선택 또는 지정 반영하는 현황을 과목별로 보면, 수시1학기 모집의 경우 인문·사회과목군에서 국어는 91%, 사회는 87%, 도덕은 61%의 대학이, 과학·기술과목군에서 수학은 89%, 과학은 86%, 기술·가정은 60%의 대학이, 예·체능과목군에서 미술은 46%, 음악은 42%, 체육은 41%의 대학이, 외국어과목군에서 영어는 84%, 제2외국어는 49%의 대학이, 교양과목군에서 한문은 45%, 교양은 31%, 교련은 28%의 대학이 이를 각각 반영한다.

수시 2학기 모집의 경우를 보면, 인문·사회과목군에서 국어는 95%, 사회는 87%, 도덕은 54%의 대학이, 과학·기술과목군에서 수학은 90%, 과학은 83%, 기술·가정은 49%의 대학이, 예·체능과목군에서 체육과 미술은 45%, 음악은

39%의 대학이, 외국어과목군에서 영어는 89%, 제2외국어는 45%의 대학이, 교양과목군에서 한문은 34%, 교양은 25%, 교련은 24%의 대학이 각각 이를 반영한다.

정시 모집의 경우를 보면, 인문·사회과목군에서 국어는 94%, 사회는 89%, 도덕은 60%의 대학이, 과학·기술과목군에서 수학은 90%, 과학은 86%, 기술·가정은 56%의 대학이, 예·체능과목군에서 미술은 53%, 체육은 51%, 음악은 48%의 대학이, 외국어과목군에서 영어는 89%, 제2외국어는 51%의 대학이, 교양과목군에서 한문은 39%, 교련은 32%, 교양은 31%의 대학이 각각 이를 반영한다.

한편 선택교육과정의 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은 수시1학기에서 72%인 54개교, 수시 2학기에서 70.6%인 118개교, 정시에서 76%인 146개교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학생생활기록부 반영특성을 보면 국민공통 기본교과이든 선택교과이든간에 과목별 반영비율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집시기별로 수시 1학기로부터 정시모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과와 과목이 다양하고 균형적인 비율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래와 같이 국·영·수 위주의 특정 교과편중이나 과목간 불균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식현상이 다소 해소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7차 교육과정의 정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초기에는 다소 우려가 없을 수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겨진다.

또한 국민공통기본교과의 반영대학들도 전과목 반영대학과 일부과목 반영대학들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 대학들이 모집시기별로 비슷하게 나타나 있고, 선택교과의 경우에는 전과목 반영대학보다 일부과목 반영대학이 훨씬 많아서 고 2-3학년의 선택중심교육과정을 적성과 흥미에 따라 학생들이 선택하여 집중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경향은 선택형 7차 교육과정의 본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고교 1학년까지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3학년에서 선택형교과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 Ⅲ. 2005학년도 대학입시전형계획의 과제

일반적으로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은 그 체제나 전형요소의 측면에서 현재의 대학입학전형의 틀과 크게 변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선택형 7차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고등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학생의 소질과 특성, 그리고 흥미에 따라 다양한 진로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전형요소를 다양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2005학년도의 대학입학전형의 틀은 대학입시제도를 안정화시키면서 고등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만 대학들이 입학하여 수학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력을 중시하고 있어서 소위 '3+1'체제나 '2+1'체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 있어서 우려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대학들이 4개의 영역을 반영하는 이유는 언어, 외국어, 수학 등의 기본적인 학력이 대학에서 수학하는데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이며 이 점에서 기본적인 실력의 배양과 함께 소질과 적성에 부합하는 탐구영역을 선택하여 집중학습을 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2005학년도 입시와 관련된 과제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수능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 3개 영역과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중 1개 영역을 선택하는 '3+1'식 수능반영으로 학생들의 수업부담이 증가하리라는 우려이다. 이 과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현재의 수능시험에서는 과학탐구, 사회탐구를 모두 응시함에 따라 수험생들은 언어·수리·외국어영역을 포함 총 5개 영역을 준비하여야 하였으나, 2005학년도부터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에 따라 과학탐구·사회탐구·직업탐구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제2외국어 및 한문영역을 제외하고는 학생이 4개 영역까지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학생들은 종전과 비교해 볼 때,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영역을 모두 준비하여야 하는 수업부담이 어느 정도 경감되고, 학생이 진학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특성과 관련된 영역들을 중심으로 심화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가 많다.

이와 관련해서는 <표-6>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표-6〉 수능영역별 반영경향

구 분		2002	2003	2005
수능 반영 영역수별 대학수	미반영		2(1.1%)	15(5.6%)
	1개 영역			2(0.7%)
	2개 영역	5(2.6%)		34(12.6%)
	3개 영역	25(13.0%)	35(18.2%)	100(37.0%)
	4개 영역	17(8.9%)	24(12.5%)	119(44.1%)
	5개 영역	145(75.5%)	131(68.2%)	0(0.0%)

\* 2005학년도 대학 수는 일부 모집단위 또는 전 모집단위 반영에서 중복 계산된 대학을 포함하여 계산한 수치임

특히 2005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되, 2002학년도 대입제도의 기본골격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정책방향과 현행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대학의 수능시험 영역 반영 수는 종전에 비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에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수업부담이 증가하리라는 우려는 점차 불식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제7차 교육과정이 선택형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과목 편식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볼 때 국민공통 기본교과든 선택교과든간에 모집시기별(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정시)로 과목별로 반영비율에 차이는 있지만 국어·영어·수학교과는 90% 정도의 대학이, 과학·사회교과는 85% 내외의 대학이, 기타 도덕, 기술·가정, 미술, 음악, 체육 등의 과목도 60~70% 정도의 대학이 모든 교과의 과목에 대해 다양하게 그리고, 비교적 균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국어, 영어, 수학 등 특정교과의 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과목간 불균형이 초래되고 고교 교육과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견해와는 다소 다른 반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시 초기에는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해도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이러한 추세가 정착되면 정상적인 교과운영을 통해 7차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선택형 수능에 따라 심화학습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된 과제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와 관련된 사교육비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문화와 교육열의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전과목 수능보다는 선택형 수능이라는 점에서 모든 과목의 과외 현상은 다소 완화될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싶다. 사교육비 증가의 문제나 과외문제와 관련해서는 누구도 정확한 예측이나 정답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현실이고, 어떻게 보면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확단할 수도 없다. 다만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반영영역이나 과목에 따라 보다 적은 과목의 수능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교육비 증가는 오히려 억제될 수 있다는 견해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 2005학년도부터 신설되는 ‘직업탐구’영역과 관련된 과제이다.

상당수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실업계 고교생들의 학습의욕과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도입된 “직업탐구”영역은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상당수의 대학이 반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수능의 직업탐구 영역의 과목 선택 또는 지정 반영 대학을 볼 때, 정시 모집의 경우 69%인 134개교가 정보기술기초, 컴퓨터 일반, 수산해운정보처리, 프

로그래밍을 반영하고 있고, 68%인 132-133개교가 농업정보관리, 공업입문, 기초제도, 상업경제, 회계원리, 해양일반, 수산일반, 해사일반, 인간발달, 식품과 영양, 디자인일반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67%인 131개교가 농업이해, 농업기초기술을 각각 거의 편차 없이 골고루 반영하고 있다.

정시모집의 직업 탐구영역 반영과목수별 대학 수를 보면, 57개교가 전체 직업탐구영역 과목 중 2과목을, 47개교가 1과목을, 25개교가 3과목을 각각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오히려 다양한 적성과 소질 및 흥미를 계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고 지금까지 특정 직업군이나 전공영역에 편중되어 있는 왜곡된 교육현실을 다소나마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다만 제도나 체제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의식의 문제가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과제를 해석하고 활용해야 되리라고 본다.

#### IV. 결 론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은 7차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 새로운 수능의 틀과 학교생활부 반영체제가 마련된 것이다. 한 마디로 학생의 적성, 흥미, 특기를 감안하여 학생부와 수능의 반영 방법이 복잡,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대학입학전형의 자율화와 다양화, 그리고 특성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특정 대학에 맞추어 수험준비를 하기보다는 제7차 교육과정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평소에 정상적으로 과목을 이수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고교 1학년의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충실

히 이수하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폭넓은 독서와 다양한 학습경험을 쌓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학습경험 과정 속에서 학생 본인의 적성과 희망을 기초로 가능한 한 조기에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나 전공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된다. 특히 자신에게 적합한 선택교과목을 결정하고 학교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함으로써 고등학교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05년의 입시의 틀은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서 모집단위에서 필요한 과목이나 영역을 반영하므로 ‘백화점식 학습’방법보다는 진학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에서 반영되는 과목을 중심으로 ‘심화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교육비 지출을 억제할 수 있고 과중한 수업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거듭 대학입시는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삶의 한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

# 토 론

---

---

〈토론 I-1〉

## 2005학년도 대입전형계획과 향후 방향

김 조 영

(잠실고등학교장)

2002학년도에 입학한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고등학교에 도입되고, 이들이 졸업하게 되는 2004학년도에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을 하게 된다.

학생의 적성, 흥미, 특기에 따라 다양하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7차 교육과정의 특성과 향후 대학입학전형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라는 특징을 감안할 때 학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이 복잡·다양해지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고1학년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향후 대학입학전형제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 몹시 혼란스럽고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학교에서는 대학입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에 의해 당락이 결정된다는 옛날의 사고에 집착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교과위주의 학습지도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수능시험에 반영되지 않는 교과목은 학생의 수업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으로 교사들의 수업 운영이 매우 어려워지고 일부 교과는 교실수업 붕괴현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시기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수능 시험과 학생부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선택형 수준별 학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과제를 모색하고자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교육이 연계된 교육정상화에 노력하고자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의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는 향후 고등학교 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현청 사무총장은 2005학년도 각 대학교의 입학전형요강을 상세히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2005학년도 대입 전형의 체제는 현행의 입시체제와 크게 다를바 없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선택형 중심 제7차 교육과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체제가 달라지고 학생부 반영 방법 등이 달라진다고 분석한 것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사료된다.

특히 2005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 계획의 과제로서 4과제를 제시하고 각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설명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상황으로 보아 2002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 제7차 교육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준비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대학교 입학관련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수년간 대학입학전형 방법 연구에 고심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말경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0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계획 주요사항”에 대해 고등학교에서 우려하는 문제점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5월 20일 이상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교장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교장단은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과 각 대학의 대학입학전형요강과의



연관성이 매우 커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2학년일 때 학습할 교과목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므로 6월말까지는 2005학년도 대학입학요강이 발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학에 조속히 입학요강 제시를 촉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 결과 8월2일 서울대학교에서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교과 및 수능 반영 방안 중 주요사항”이란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첫째, 제7차교육과정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둘째,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과목별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신성적반영에서 교과목별 최소 이수단위를 제시한다고 하였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수합하여 발표한 “200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계획 주요사항”내용 중 경희대, 숙명여대, 건국대, 아주대, 중앙대학교 등의 내용은 고등학교에서 우려한 바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 운영과 상충되어 대학의 요구를 충족하기가 매우 곤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대학입학전형방법·절차는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정책실이나 대학지원국, 고등학교 교장단이 대학의 입학전형방법에 대하여 논할 처지는 못된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도입되는 제7차 교육과정과 연관되게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수년간 교수, 교사, 학부모, 사회인사들이 합의하여 만들어 고시한 보통교육의 방향이며 21세기 미래사회에 대비한 인재양성을 위한 국민 교육의 기본틀인 제7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학교 현장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연계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 후 서울대학교와 전국 일반계고등학교 교장단이 수차례 협의하여 서울대의 요구사항도 충족되고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도 무리가 없도록 조정된 바도 있고 경희대, 숙명여대도 일부 수정하여 큰 문제가 없도록 조정되었다. 그러나 건국대, 아주대, 중앙대에서는 아직도 자신들이 제시한 조건을 조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대학의 1학기 수시 모집의 내신성적 반영의 문제점은 2학년에서의 교과학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과도하게 지정하고 심지어는 과목까지 지정하는 경우 때문이다.

#### o 건국대학교(서울)

인문 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국어, 수학, 과학, 영어는 국민공통 교과를 제외하고 각 8단위 이상, 사회는 6단위 이상을 요구하는데 2학년까지 상기 단위를 이수할 수 없다. 특히 인문계열의 과학과 수학을 8단위씩 이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자연계열도 사회과목 6단위를 2학년까지 이수하기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교과에 국민공통교과를 포함하든가 단위 수를 줄여주고, 과학(인문), 사회(자연) 선택과목 단위 수를 대폭 하향하여 주어야 한다.

#### o 아주대학교

인문·사회계의 국어(2), 수학(2), 영어(2), 도덕, 사회 중 (2)과목 선택 자연계의 국어(2), 수학(2), 영어(2), 과학, 기술·가정 중 (2)과목 선택을 요구하였는데 서로 다른 2과목씩을 이수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본다.

-2과목을 타 대학처럼 동일과목이라도 1학기과 2학기과를 이수하면 2과목으로 간주해 주어야 한다.

## o 중앙대학교

가장 조건이 까다롭게 발표하였다. 인문 예체능계열은 국어생활을 포함하여 택 2과목, 사회교과는 인간사회와 환경 포함 택 2과목, 영어교과 중 택 2과목, 위의 국어, 사회, 영어교과와 교양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에서 택 4과목(단 동일교과에서 2과목 이내 선택), 자연계열은 수학과 중 실용수학 포함 택 2과목, 과학교과 중 생활과 과학 포함 택 2과목, 영어교과 중 택 2과목, 위의 국어, 사회, 영어교과와 교양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에서 택 4과목(단 동일교과에서 2과목 이내 선택)

-특정한 교과인 국어생활, 인간사회와 환경, 실용수학, 생활과 과학을 지정하지 말고 동일과목이라도 1학기과 2학기과를 이수하면 2과목으로 간주해 주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입학 정책의 기본방향은 현재와 같은 기본틀을 유지하며 학생 선발 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입학전형방법 및 대학의 요구사항에 대해 고등학교에서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대입제도 운영이 여론에 떠밀린 교육부의 정책변경과 대학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등학교가 대학과 독립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등 보통교육 기관으로서의 적절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되어 고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에 저해 요소가 된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우리 국민의 인식은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고등학교 3학년의 교육과정 운영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졸업식날까지 고등학생 특별 면학지도 등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입제도는 고등학교의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성을 유지해야 하는 당

위성이 있다. 대입제도가 대학의 입장에서는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로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해야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의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는 맥락에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대학교육 적격자 및 우수학생 선발도 고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전제하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만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 방향은 학생의 입시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여 현행 4+1 수학능력시험제도에서 2005학년도에는 2+1 또는 3+1에 제2외국어 선택과정을 두도록 각 대학교에 권장하고 있다.

앞으로 각 대학이 요구하는 최소이수단위교과와 수학능력시험 교과 반영에 따른 문제도 심각하다. 제7차교육과정에서는 인문계, 자연계열이 없어지고 학생 선택에 의해 수능시험 과목이 결정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인문·사회계열의 전공분야에 진학하려는 학생은 언어, 외국어, 수리탐구영역 외에 사회탐구영역만 수학능력시험을 보게 될 것이다. 사회탐구영역 과목도 현재와 같이 전 사회교과가 통합교과적으로 출제되지 않고 학생선택에 의해 4과목만 시험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 학생의 경우 학생의 부담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수학능력시험교과가 아닌 사회과목과 과학교과목 수업에서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겠는가? 반대로 자연계·이공계열 전공분야에 진학하려는 경우에는 수학능력시험교과가 아닌 과학과목과 사회교과 수업에서 집중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염려되는 바가 크다.

## □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염원

### ○ 수학능력시험의 반영 방법 개선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을 글자 그대로 대학입학자격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되 그 기준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된다. 어차피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특성화되어 있지 못하므로 대학에 대한 선호도, 서열은 지원학생에 의해서 이미 기정화 사실화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그 대학의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도 이제는 대학들이 스스로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수험생의 부담,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학은 수학능력이 있는 적격자가 선발되어야 하므로 2+1, 3+1을 고집하기 보다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운명을 연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 ○ 수학능력시험의 시기 조정

1960~70년대 대학예비고사, 대학입학학력고사란 말을 사용할 당시에는 12월에 실시하였다. 그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바뀌고 다단계선발방법의 도입, 수요자중심교육의 기치 아래 지원 기회의 다양화를 도모한다고 하여 정시모집에서 가, 나, 다, 라군으로 현재는 가, 나, 다군으로 전형시기를 나누고 있으나 원서 접수 마감은 현재에도 거의 동일 날짜 전후에 이루어진다. 또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 전산자료도 제공되었으므로 가, 나, 다 모집군의 대학입학 선발 업무는 어느 대학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발표시기만 다를 뿐 아니겠는가?

1970년대보다도 2002년 현재의 컴퓨터 처리능력, 기술이 월등히 향상되어 성적처리기간은 매우 단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기를 12월로 늦추고 12월말일경에 그 결과를 발표, 1월 중에 대학입학전형을

실시하고 2월에 전문대학 입학전형을 실시한다면 지금과 같이 고3 특별면학지도란 미명 하에 파행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진정으로 이번 기회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대학교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청한다.

### o 대학이 요구하는 대학별 전형의 완전 자율화의 실행

단순 지식의 암기와 반복적인 문제풀이식의 고등학교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습자의 창의력, 탐구력이 길러지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별로 다양하게 자율적으로 그 대학의 건학이념이나 교육목표에 따라 각 대학의 특성이나 모집단위특색에 맞게 다양한 대학입학전형이 될 수 있도록 대학에 맡겨야 한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입학전형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하나 각 대학들은 각종 대학평가나 예산 배정으로 보이지 않는 통제가 가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는 대학입학시험만큼은 각 대학의 선발자율권을 보장하고 다양하게 선발할 수 있고, 특성화 될 수 있다면 적극 권장해야 한다. 이럴 경우 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대학의 선발 방법에 따른 반편성이나 특수교과반 지도를 할 수 없으므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교육비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학에 선발의 자율권을 준 대신 대학입학 전형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한다면 학교 폐쇄 등 과감하고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 질서를 확립해야만 한다. 과거에 입시 부정이 있을 때 너무나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 되어오지 않았는가? 입시부정은 서민으로서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다. 이런 사실들의 누적이 오늘 우리 사회 지도계층이나 교육인적자원부가 불신을 받는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대학과 사회는 고등학교가 본연에 충실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산출된 개별 학생의 기록을 믿고 필요한 지원자들을 선발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을 대학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제3의 외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하나의 오만으로서, 교육기관으로서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고등학교의 자율성을 유린하는 이율배반적 처사이다. 고등학교 교육은 고등학교가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 o 능력위주의 사회구현을 위해 학부모나 사회의 인식전환에 모두가 노력하는 사회

학부모와 기업체의 역할과 과제로는, 새로운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학부모는 ‘시험성적 올리기’라는 경쟁적 교육관에서 탈피하여 자녀들의 개성을 살리고, 다양한 독서로 사고력을 키우며, 봉사활동·협동생활에 적극 참여하여 서로 협력할 줄 아는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 기업체가 지금까지 대학간판에 따라 입사 지원자를 차별화한다면, 새 대학입학 전형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더라도, 머지않아 다시 대학을 서열화시켜 새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체는 입사지원서에 대학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대신 취직 응시자의 컴퓨터 수행능력(자격증 등), 외국어 수행능력(토플, 토익 등) 등 심층면접을 통한 인성 등 인품과 능력위주로 선발하여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후 평생교육 차원에서 2부 대학 등을 졸업하면 4년제 대학졸업 후 입사한 사원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사회 풍토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은 특히 실업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모든 기업에서 과감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노력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언론은 바른 고등학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일류대학에 몇 명 입학시킨 학교 명단으로 고등학교를 평가하는 자세에서 얼마나 다양한 노력이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또 학부모나 기업체의 인식전환을 위해 꾸준히 계도적인 보도의 사명이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고 실천되기를 기원한다.

금번 한국교육협회의 교육정책 포럼은 고등학교의 어려움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고등학교 교원들은 언제까지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입학전형에 매달려야 하냐고 푸념도 하고 있다. 이제는 대학과 고등학교가 서로의 의견교환을 통해 2005학년도에 입학전형제도가 대학의 입장에서는 적격자를 선발하고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이 정상 운영되어 본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도와줄 것을 기원한다.



〈토론 I-2〉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과 과제

이 결 우

(교육인적자원부 학술학사지원과장)

2005학년도 대학입학시험전형은 현행 대학입학제도의 정책 기본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대학입시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대학별 학생선발 방법의 자율화·다양화·특성화 정책 지속이다. 즉,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 방법은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학생의 소질, 적성, 특기 및 대학의 교육이념과 모집단위별 특성을 적극 반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별대학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시험점수에 의한 수험생 ‘한 줄 세우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자료를 통한 ‘여러 줄 세우기’ 전형을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둘째, 고등교육법시행령에는 대학이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제31조제1항). 이에 따라 2005학년도 대학입학제도는 대학으로 하여금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선발방법을 도입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대학수능시험 성적의 비중 축소 및 일부 영역의 반영, 수능시험 영역별 가중치 부여, 그리고 영역별 등급제의 적극 활용, 학생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및 비교

과 관련 기록의 다양한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2005학년도 대학 입학제도는 제7차 교육과정 및 작년 12월 28일에 발표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작년 말 2005학년도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8월 각 대학별 전형계획을 발표한 후 그러한 우려는 많이 정리되어가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입시전형이 일선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데 많은 부담이 되고 7차 교육과정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도록 되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있었으나, 서울대학교가 지역 교육청 관계자들과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만히 해결한 것은 대학이 입시전형계획을 수립할 때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주제발표내용 중 대학별 과목 및 영역 반영 방법을 보게되면 과목편식현상, 학생들의 부담가중, 다양한 대학별 전형에 따른 학생들의 혼란 가중 등의 우려들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판단된다.

대학입시에 있어서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영국, 프랑스 등 외국의 대학입시제도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시하는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문제를 그들의 문화와 인간에 대한 신뢰로 극복하고 제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 하겠다. 2005학년도 대학입시제도도 우리가 그 단점만 바라보고 흠집을 낸다면 얼마 가지 않아 또 '개편'이라는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입시전형은 대학자율로 결정하며, 다만 정부에서는 기여 입학제, 고교 등급제, 및 본고사 실시만 금지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배려한 정원 외 특례입학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위 세 가지 금지사항은 우리나라의 사회여건과 교육환경을

보아가면서 하나하나 폐지여부를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입시는 대학과 중등교육 당사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는 관계성의 확대 속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철골 구조물에 시멘트가 입혀져야 튼튼해지듯이 우리나라 입시제도에도 그 제도를 살찌울 수 있는 문화를 키워 나가야 한다.

### 학생진로지도 노력

현행 제도 하에서 학생들의 진학지도를 잘해나가는 것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가장 급선무로 생각된다.

학생의 적성, 흥미, 특기에 따라 다양하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의 특성과 향후에도 대학입학전형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존중의 기조가 유지된다는 특징을 감안할 때 학생부와 수능의 반영방법이 복잡·다양해지는 것은 불가피하고 자연스런 현상이라 하겠다. 따라서 일선 고교에서는 특정대학에 맞추어 수험준비를 하기보다는 제7차 교육과정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평소에 정상적으로 과목을 이수하도록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수험생이 기본적으로 고교 1학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폭넓은 독서와 다양한 학습경험을 쌓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과의 상담 등을 통해 학생 본인의 적성과 희망을 토대로 가능한 한 일찍부터 학생들이 적합한 진로를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나 전공분야를 선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진학방향이 정해지면 이미 발표된 “대학별 학생부, 수능반영계획”을 참고하여 학교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 자신에게 적합한 선택교과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대체로 대학에서의 과목(영역) 반영 방식도 전공분야의 특성이 유사한 경우 유사한 과목(영역)을 반영하므로 상급학년으로 진학할 수록 학생이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분야에서 반영되는 과목을 중심으로 ‘심화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입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2005학년도에도 현행 대입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향후 전반적인 대입제도의 운영도 현행과 동일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입학전형에 있어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여 대학별로 다양하고도 특성화된 전형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제도의 효과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 일선 고교 등에서 제기된 부분적인 문제점들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해 나가며, 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또한, 입시부정 방지, 최소한의 법령 및 원칙 준수 등 공정한 입학전형과 고교 교육정상화를 위하여 대입관계자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입학전형이 대학과 고교, 학생간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제 대학입시 자율화를 지속·발전시켜 나가야할 주체는 대학과 중등교육관계자들이다.

## 제 언

바람직한 대학입학전형은 대학과 고등학교간에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대화의 과정 속에서 정착되어 가야 한다. 고등학교의 교육목적과 대학의 학생선발 목적이 조화될 수 있도록 이제는 대학과 고교의 교육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할 것이다.

고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그 과정에서 배출되는 학생도 대학에 진학한 후 보다 나은 인재로 다듬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의 학생선발 기준과 방법은 좀 더 고등학교 현장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공정한 입학전형을 실시해야 한다. 고등학교도 대학에서의 우수인재 선발방식에 대한 이해와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어떠한 방식으로 계발해주어야 학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좀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다.

〈토론 I-3〉

2005년 대학입학전형 계획과 향후 방향

이 기 태

(경희대학교 입학관리처장)

인적자원이 중요한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정책은 나름대로의 고유한 교육 목적에 적합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입시에 관한 국민적 관심은 교육의 원래 목적보다는 사회적 신분보장 및 생업에 대한 일종의 자격증과 응용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다각적인 환경요인의 고려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제도는 각종 전형에 있어서 그 평가요소가 객관화되어야 된다는, 즉 수능제도와 같은 획일화로 일관해온 지 오래되어 이를 전환하기에는 시간적 완충 방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수년을 두고 준비해 가는 초중등과정의 대입 전형과 어느 정도 어울려야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으로 일단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제도의 변화를 예고하였으나, 사실 대학의 입장에서는 부분영역반영을 활용한 2003, 2004학년도 대입전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갈등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과연 어느 정도를 활용하는가, 즉 반영교과의 수에 해당되는 문제일 것이다. 우수한 학생 확보에 자신이 있는 대학은 전교과를, 그렇지 않은 대학에서는 부분교과를 반영할 것이다. 현재 평준화/비평준화, 자율화/획일화, 또는 고교/대학의 서열화 등 많은 양면적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대입전형에 관련한 요소를 자율화로

유도하는 분위기이지만 이 자율화속에는 역시 현재 부각되지 않는 양면성의 다른 부분이 부각될 것이다. 그러나 기초학력의 저하에 관한 문제는 필히 보완을 해야할 것이다. 근래 이공계 기피현상은 사실 정보화시대, 개별 경쟁력 강화시대 등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안정적 직업선택의 문제보다는 교육 초기에 있어 개성 강조를 미리 하고, 이에 따라 싫은 것은 하지 않으려는 지적 편식현상으로부터 유발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건디는 힘의 부재로, 기초를 든든히 하지 않고 높게만 쌓으려고 하는 경향은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취지는 원론적으로 옳은 교육방향의 전개이지만, 입시가 사회적 자리잡음의 중요한 관문으로 생각하는 사회가 존속하는 한 역시 사상누각의 위험성을 가지게 되며 힘든일, 싫은 일을 기피하려고 하는 취약한 사회적 구성원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교육제도를 일시에 달리할 수 없는 현실이고 보면 우선 보완적 요소를 확실히 하며, 이 보완적 요소의 적용기간을 완충의 기간으로 하는 전제로 교육과정을 다듬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보완요소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우선 시행해 볼 수 있는 일은 수능 시험을 주 전형요소로 하지 않고 자격요건화 하는 일인데, 이 방안은 서울의 주요대학이 함께 병행하여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대학에 따라 수능을 자율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부와 추천의 신뢰에 관한 한 자신이 없는 다수의 대학에서는 달리 다른 전형요소를 적용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유사한 현상으로 2005 수능관련 대학의 반영영역과 학생부 반영교과는 대부분이 국/영/수 중심이다. 대학은 수험생의 기초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를 검정하고 싶은 것이다. 사회의 어느 과목 또는 과학의 어느 과목이 국/영/수 보다 우선으로 전형요소로 반영하지는 않는 현실이 본고사를 허용하지 않는 한, 수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유사하다. 수능의 응시 영역을 제한하여 7차 교육과정의 원래 취지가 잘 활용되도록 학생의 자질을 키우면 좋으나, 수험생은 수능의 힘이 큰 상황에서 교과를 익힐 때 자율적 창의성보다

는 타율적 암기력으로 높은 점수를 따려고 힘을 쓸 것이다. 학력의 또 다른 저하를 예견할 수 있다. 교육현실과 부정적 사회풍토를 떼어놓고는 싶지만 교육원론은 사용할 힘이 부족하다.

미래의 교육정책에 가장 필요한 원칙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적구성을 예견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교육학자가 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실용학문을 응용한 분야에서 인재상을 구하고, 이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사회의 리더가 전체 구성을 구상하며, 이를 완성하기 위한 인성교육의 구현을 적용하는 종합적 체제가 필요한 일의 덩어리이다. 이러한 맥락을 더듬어 본다면 2005년 이후의 대입전형은 우선 현행의 제도 보완적 측면에서 주어진 만점을 놓고 객관적 상대평가를 유도함보다는 만점을 열어놓고 절대평가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수시전형을 활용하여 수시는 주관적 평가로, 정시는 객관적 평가로 유도하며 수시의 주관적 평가를 고교의 정상적 교육과정 소재로 제한하되 무정형화된 답안을 대학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는 방안도 한 예가 될 수 있다.

인본 위주의 교육으로 미래를 영도할 잠재력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건에 기초가 두루 갖추어져야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는 출제연구도 필요하다. 이는 상설 연구기관의 운용으로 가능할 것이다. 근래에 들어 사회적인 관점에서 대학 내 전공의 인기순위 변동 및 소멸 주기의 급변, 신속한 정보의 공유로 인한 연계 및 학제간 분야 수요 증가 등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학문적·사회적 요구에 교육의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



---

---

## 주 제 발 표 Ⅱ

---

---

〈주제발표 Ⅱ〉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제도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과제

이 상 갑

(경북고등학교 교장, 전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

우리 나라 교육과정 역사상 처음으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부여한 제7차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교육의 개혁' 차원에서 접근되었다는 점을 먼저 상기하고자 한다. 교육개혁위원회는 1995. 5. 31일에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등 12개 항목의 개혁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과정을 적성과 능력을 살리는 학교교육으로 전환하자는 이정표적 선언이었다. 우리의 고교교육이 그동안 모든 과목을 잘 해야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백과사전식 과목 운영,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주입식 전수로 인한 획일적인 인간 양성에 대한 반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학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의해 기본 소양교육에 치중하지만 2-3학년은 교과 선택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대학수능시험에서 이를 평가하고 대학이 그 결과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추어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입시위주의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2002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2005 대학 전형제도는 우리 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1. 2005 대입전형 제도의 경향

2005 대입 전형제도는 제7차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일선학교의 교육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본 전형요소로 하되, 전공계열 및 학과에 따라 반영방식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일선학교의 입장에서는 수능영역을 교육인적자원부가 권고한 2+1(3개 영역) 방식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좀 더 많았더라면, 2-3학년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더구나 대입 전형(안)이 2002학년도 2학기에 임박해서 발표된 관계로 2003학년도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과 교과서 주문이 지연되었던 점을 또한 안타깝게 생각한다. 2005 대입 전형제도의 중요한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대부분의 대학이 3~4개 수능 영역을 반영

정시모집 기준으로 수능의 대학별 반영계획을 살펴보면 언어, 외국어, 수리 영역 중에서 2~3개 영역과 사탐, 과탐, 직탐 중 1개 영역을 선택하는 '2+1'(3개 영역) 또는 '3+1'(4개 영역)방식이 대다수이다.

3개 영역 반영대학이 37%인 100개, 4개 영역 반영대학이 44.1%인 119개인 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상당수 주요대학은 전체 모집계열(일부 예체능 계열 제외) 또는 대부분 계열에서 언

어, 수리, 외국어 3개 영역과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중 1개 영역 등 이른바 '3+1'체제를 채택해 4개 영역을 반영한다. 특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인문계열 모집단위는 제2외국어 및 한문영역까지 반영하는 3+2 방식으로 볼 수 있다.

2개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은 한국체대 등 34개, 1개 영역 반영대학은 부경대와 울산대 일부 모집단위이며 수능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은 대구예술대 등 15개다.

수시 2학기 모집에서 수능성적을 최저자격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학은 77개로 2003학년도 31개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은 고교 1학년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은 필수, 2, 3학년 선택과정은 선택적 반영**

학생부의 대학별 반영계획은 고교 1학년까지 배우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등 10개 교과목 성적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이 정시모집에서 103개로 대부분이고 일부만 반영하는 96개 대학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의 과목은 비중있게 반영한다.

고교 2, 3학년 때 배우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이 이수한 전체교과영역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동국대, 서울교대 등 48개이지만, 일부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143개로 더 많다.

○ **실업계고 학생을 위한 직업 탐구 영역의 신설 및 정원외 3% 동일계 전형**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에 대해 대학 문호를 열어주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하여 사회/과학탐구 영역과 선택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실업계열의 전문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한 학생들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공업계, 농업계, 상업계, 수산해운계, 가사실업계 등 실업계열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 모집시기

2005학년도에 수시 1학기 모집을 하는 대학은 75개, 수시 2학기 모집대학은 167개, 정시모집 대학은 192개로 2003학년도보다 수시 1학기 모집이 9개, 수시 2학기 모집이 1개 늘었다.

#### ○ ‘맞춤형 학습’ 요구

2005 대학전형 방안에 따라 학생들은 지방대학, 학과를 미리 정해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영역과 선택과목을 집중 공부하는 ‘맞춤형 공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수능의 경우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이나 모집단위가 어떤 영역을 요구하는지, 수리탐구의 경우 수리 '가'형인지 '나'형인지,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의 경우는 수능을 치를 때 세부적으로 몇 개 과목을 응시해야 하는 지를 살펴봐야 한다.

학생부도 고교 1학년 때 배우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대부분의 대학이 1학년 때 배운 10개 교과 전체성적을 요구하지만 고교 2, 3학년 때 배우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이수단위를 아예 지정하거나, 몇 개 교과 내에서 몇 개 과목씩을 지정하는 등 천차만별이므로 적절히 대비해야한다.

【참 고】

현행시험과 2005시험대비

현 행	2005년도
언 어	언 어
수 리	수 리(가·나형)
사회탐구.과학탐구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	제2외국어/한문
외국어(영어)	외국어(영어)

2. 당면 과제

- 과정 개설과 교과 집중이수를 위한 선택중심 교육과정 설계

2005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제도의 밑그림이 제시됨에 따라 일선학교에서는 선택중심 교육과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교과서를 주문하는 등 2003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선택과목을 단위학교가 어떤 식으로 개설·이수시키느냐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의 성패가 좌우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이며, 학생 개인으로 보면 학업 성취 및 대학입시와 진로를 좌우하는 학습의 핵심적 부분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여 과정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지만 단위 학교의 여건으로 보나, 교육과정 편성 기준으로 보나 학생 선택권을 무제한 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선학교에서는 대입전형안에 따라 대안 없이 현재의 계열을 폐지하기보다는 계열을 좀 더 세분화한 형태로 필요한 과정을 설치하고 2~3개의 교과 균을 집중이수하게 하는 방향으로 선택중심 교육과정(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학생들에

게 진로인식을 분명히 하도록 안내하고, 학생들 스스로 책임 있게 자신의 학습 과정(track)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과정 개설과 교과 집중 이수제를 토대로 하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설계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대학이 대수능에서 3~4개 영역을 반영하고 반영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학생부 성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능성적과 학생부 평가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대수능 체제 개편안은 ‘수리’영역과 ‘사회/과학’ 영역에 대해 진로에 따라 집중적인 학습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도 과정 개설과 교과 집중 이수제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심 개념으로 자리하여야 한다.

#### ※ ‘선택’의 교육적 이해

고등학교 2, 3학년에게 적용될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육을 받은 후 학생들의 진로, 적성, 능력에 따른 선택을 존중하여 편성·운영되는 교육과정이라는 의미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부른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학생의 희망과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좋겠지만 학생의 선택이 언제나 올바르다고는 할 수 없다. 수요자 중심 교육은 단순히 학생의 요구에 따르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교육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일선학교에서는 학생의 교과목 선택이 대학입시와 관련이 높은 과목으로만 편중되거나 흥미 위주의, 점수따기 쉬운 교과목만을 선택하는 현상을 지양하고, 학생에게 진로 및 과목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학생의 선택이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선택’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선택권을 주체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진로, 소질, 적성, 흥미와 능력에 맞게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 3.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실제

#### 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활성화

제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여야 한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 협의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협의체로서 올바른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구성, 운영하며, 하위 조직으로 각 교과위원회나 영역별, 분야별 실무 협의 조직을 두어 실질적인 실무 작업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 단계에서부터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전체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물론 해당 교육과정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2003학년도부터는 학생들의 과정 이동의 교과 선택 유동성 확보(수강신청 변경 등), 학생 선택권의 점진적 확대,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정의 개설 기준, 수강 학생수가 천차만별인 과목의 평가 기준 설정, 공강(blank time) 시간의 활용 방안 등 부딪히는 현안들에 대해 학교교육과정위원회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이들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나. 진로지도의 강화

획일적, 폐쇄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는 21세기가 요청하는 창의력과 전문성을 가진 인간을 기를 수 없다. 제7차 교육과정은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육의 사회적 적합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차를 존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2·3학년에 적용되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 진로에 적합한 내용, 적절한 수준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해주어야 한다. 우선 1학년에서 적절한 진로지도 및 선택과목 안내를 해 주어야 하며, 이 안내에는 개설 과목의 성격과 내용, 개설 시기, 각 과목과 관련된 진로, 선수·후속학습 과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학부모의 영향을 생각하면 학부모는 진로지도의 협력자일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시행되면 학생들이 쉬운 교과, 입시와 관계 깊은 교과목을 편중하여 선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기도 한다. 실제로 학생들은 자신이 배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본 적이 없고,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도 별로 없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면서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교사의 중요한 책무중 하나이다.

#### **다. 학생선택권 확대 및 과정의 탄력적 운영**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2003학년도에는 학생 선택의 비율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존중하되,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향후 과정 및 과목의 확대 개설이 가능한 학교부터 점진적으로 학생의 선택 비율을 높여가도록 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이 강조하고 있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하는 학교의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2003학년도에 2학년에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도입되면 학생들이 진로 수정에 따른 과목 및 과정의 변경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는 2학년초에 인문 혹은 자연계열을 일단 결정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간에 계열간 이동이

불가능하였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과정간 이동과 과목 선택의 변경이 최대한 자유롭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학교의 여건을 감안하되 수요자의 요구에 근거하여 가장 적합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라. 평가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과목 선택이 다양화됨에 따라 평가 대상 모집단이 다양하므로 이전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평가 방식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평가에서 주요 문제로 대두된 교과 평가와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방향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고자 한다.

### 1) 교과 평가제도의 개선

일선학교는 제7차 교육과정 총론(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 중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 616호(해설), 시·도교육청 지침을 기초로 하여 단위학교에서는 교과협의회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을 통해 평가의 타당성, 공정성,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학교내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교과목의 평가

제7차 교육과정의 특색은 엄격한 계열 구분이 없어졌으므로 교과목별 총 이수학생을 재적수로 하여 석차를 산정하고, 성취도 평정을 하게 된다. 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성적산출을 위한 재적수는 해당 과목을 이수한 학생수로 하되, 단계형 수준별 교과는 해당 과목을 이수한 동학년 학생수로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 616호(2001. 4. 1) <부록 6>]

#### ○ 인근 학교 연계 교과목의 평가

인근 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 석차의 분모는 그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로 하되, 계열이 다른 경우는 구분하여 산출한다. 문항지는 그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출제하게 되며, 평가 또한 학교 구분 없이 수강 학생 전체를 석차 분모로 하여 실시하게 된다.

고등학생이 타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 석차의 분모는 그 과목(정)을 수강한 학생수로 하되, 계열이 다른 경우는 구분하여 산출한다. 다만, 이수 과목의 석차를 산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산출하지 않고 교과목명과 성취도만 입력할 수 있다.(위 훈령의 해설서)

이 외에도 인근 학교별로 학사 일정을 동일하게 운영함으로써 학생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학생의 이동 및 교사 순회, 시설 활용의 어려움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 공동 출석부를 활용하는 방안, 공동 출제, 점수의 공동 인정 등 평가 방법 및 처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선택교과의 평가 방안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는 각 교과에 따라 교과 특성에 알맞게 적절하게 평가를 하되, 사전에 표준기준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항상 공개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특정 교과가 쉽고 점수를 올리기에 편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경우 학생들이 특정 교과에 몰리는 경우가 있어 다른 교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선택 과목의 난이도를 객관적 기준으로 관리하여 학생들에게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 2) 학교 교육과정의 평가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이며, 일선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가 주체가 되어 교육과정을 실천적으로 운영하고 스스로 그 결과를 평가하여 자기 환류(feedback)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학교 공동체 구성원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교사들이 주체적으로 평가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가르치는 학교의 교육과정 실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무엇이며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사실 그동안 교육과정 평가라고 하면 최근에 논란이 된 학력평가나 외부 평가단에 의한 학교경영평가 등을 연상하여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학교 교육과정 평가는 학교 구성원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교육활동에 대한 자체 반성적 활동이다. 결과에 따라 책무성을 묻는 평가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반성하고 더 나은 교과 규정의 준수를 강조하는 생활지도로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상담과 진로지도를 위한 전문 상담교사 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간 이동이 빈번해지므로 학생들간의 접촉 방식의 변화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협소한 공간(복도)를 통해 학생들이 한꺼번에 이동함으로써 안전사고의 위험도 증가한다. 이를 감안하여 학생 이동 동선의 병목 현상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야 한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시행되면 (마치 대학생 처럼) 전통적인 담임 제도나 학급 개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4.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 (2005 대학입시에 대한 문제점 및 현장의 요구)

2002년부터 고등학교에 도입된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의 능력·적성·진로에 맞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택중심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새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제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상위권대를 중심으로 일부 대학에서 제7차 교육과정 도입의 근본 취지와 일선고교의 실정을 무시한 입시안을 발표하여 일선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물론 대학 입학에 위한 전형방법은 학생의 선발권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고유권한이다. 각 대학은 나름대로의 교육목표와 방침이 있으며, 학생의 선발에 있어서도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알맞은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은 고등학교의 교육이 대학 입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일부 상위권 대학의 입시제도는 여타 대학 및 중등 교육 전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대학입학 전형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입시제도

지난 번 특정대학에서 제시한 ‘교과별 필요 최소 이수단위 수’나 일부 대학에서 제시한 특정한 과목을 요구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7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고 앞으로 교육과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데 있다.

현재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있어서 국가 수준에서

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편성 및 운영방법은 시도와 학교의 여건 및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청, 학교, 학생의 각 주체별로 과목의 선택권이나 지정권을 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대에서는 대입전형제도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을 내세워 ‘교과별 필요 최소 이수단위 수’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전국의 각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단위 학교의 특수성을 살릴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교육과정 지침과도 어긋나는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 이와 같은 제도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각 대학마다 이러한 제도를 제시한다면 학교에서는 학생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따라 별개의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하므로, 극단적으로 A대반, B대반, C대반 등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학생의 폭 넓은 교양과 인격을 도야하며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다양한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입시를 위한 준비 기관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해당 교육을 충실히 받은 학생이 진학하는 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도록 즉,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도움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서는 대입전형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나. 학생의 학습부담을 덜어주는 입시제도**

당초 교육부에서 제시한 2005학년도 입시제도는 학생의 학습부담을 덜어주고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정신에 따라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계열의 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안되었다. 이에 따라 2005학년도 수능의 기본 체제는 계열의 구분을 없애고, 학생 개개인이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언어와 외국어는 기본으로 하고, 수리탐구에서 ‘가’형이나 ‘나’형을 택일하고,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래의 수능체제에 비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각 대학에게 수능 5개 영역 중에서 계열성을 고려하여 '2+1'정도의 반영 영역을 요구할 것을 권장하였다. 즉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언어, 외국어, 사탐 정도, 이공계열에서는 언어, 수탐, 과탐 정도를 요구하여 학생의 수능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에서 '3+1'체제(4개 영역)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의 모집단위에서는 5개 영역 모두를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아직 대학별로 상세한 모집요강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일부대에서는 논술을 부활하는 등 학생들이 입시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된 실정이다.

우리 나라 교육의 큰 문제점은 학생들이 입시에 얽매어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며,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다양하고 폭 넓은 학습과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점에 유의하여 각 대학에서는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특기와 적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다. 학교의 여건과 실정을 고려한 입시제도**

각 대학에서는 전국의 모든 학교와 학생들의 여건과 실정을 고려하여 대입 전형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교과별 필요 최소 이수단위 수'나 특정 과목을 요구하는 것은 이를 실현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에게는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대 등에서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경시한 지나친 요구라고 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선택의 비율을 최대 50%까지로 하되 학교의 실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각 고등학교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교원을 최대한 고려하여 최소의 범위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선 학교의 여건과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가 없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몇 가지 점에 유의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 수능 및 학생부에서 가급적 모집 단위별로 특정한 과목을 요구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계열을 넘나드는 교과목의 이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테면, 이공계열의 과목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인문 사회 계열 교과목의 과다한 이수요구는 재고되어야 한다.

-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학생부의 내신 반영에는 출결, 봉사활동, 특별활동 등의 비교과 영역 반영 비중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수능 5개 영역 중에서 계열성을 고려하여 '2+1' 정도의 영역을 반영하도록 권장한 교육부의 안을 존중하여 각 대학에서는 수능 반영 영역을 축소하기를 바란다. 즉,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언어, 외국어, 사탐 정도, 이공계 열에서는 언어, 수탐, 과탐 정도를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 입시의 다양화 측면에서 수시 모집의 확대는 찬성하되, 심층면접이나 논술의 반영은 사교육비 증가나 학생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출제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특별전형의 경우는 정교한 연구를 거쳐서 영역의 선택이나 기회의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하며, 입학 후의 적응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제시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대학별 입시 전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일선학교의 7차 교육과정의 정착 및 충실한 운영을 고려하여 계속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친 전형제도



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참 고】**

평가영역		출제 범위에 직접 포함되는 교과목
언어		현행과 동일 (국어교육의 목표를 중심으로 한 시험으로서 특정한 교과목을 상정하지 않으며 범교과적인 주제와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
외국어(영어)		현행과 동일 (영어교육의 목표를 중심으로 한 시험으로서 특정한 교과목을 상정하지 않으며 범교과적인 주제와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
수 리	‘가’형	수학 I + 수학 II+(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 3개 교과목 중 택1)
	‘나’형	수학 I
사회/과학/직업탐구	사회탐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근·현대사, 국사, 세계사, 법과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윤리(윤리와 사상+전통윤리) 등 11개 교과목 중 택4
	과학탐구	물리 I, 물리 II, 화학 I, 화학 II, 생물 I, 생물 II, 지구과학 I, 지구과학 II 등 8개 교과목 중 택4
	직업탐구	17개 교과목 중 택3
제2외국어/한문		제2외국어 I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7개 과목 및 한문 등 총 8개 교과목 중 택1

**5. 제언 및 결론**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을 개혁하여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주도해

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제로의 전환은 일선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도 전형제도의 개선을 통해 책임을 공유하여야 할 과제이다. 일선 고등학교는 대입 전형제도가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설정되기를 기대한다.

사실 우리 입시 문화 여건상, 고등학교에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학부모들은 2005 대학입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의해 당락이 결정될 것이라는 사고에 집착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위주의, 과거와 같은 관행화된 입시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당장 2003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반영되지 않는 일반 선택과목은 학생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질 우려가 있다.

또 내년부터 실시되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시행을 앞두고 일선 학교에서는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대학교에서 최소 필수 이수단위를 요구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안)을 일부 수정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은 대학입시로부터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물론 학생의 소질과 진로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형태이지만, 대학 진학을 의식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는 단시일 내에 바뀌기 어렵다.

따라서 내년말에 예정된 2005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마련할 때 이러한 일선학교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예를 한 가지만 든다면, 과목 석차 백분율만을 적용하는 과목 성적 반영 방법은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석차 백분율이 적용되는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심화 선택과목 중에서 학습의 위계가 높은 몇몇 어려운 과목은 내신 성적 관리를 이유로 기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영어 작문’ 과목의

경우, 영어 교과에서 가장 학습의 위계가 높은 과목으로서 높은 수준의 심화 학습을 희망하는 소수의 우수한 학생들이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과목이지만 과목석차 백분율을 적용한다면 그나마 신청자가 격감할 것이다.)

이제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제7차 교육과정은 일선 학교에서 정착 단계에 있다. 각계에서 기대와 우려 속에 준비하였던 2003학년도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도 일선 학교에서 편성(안)이 확정되어 이제 교원 수급과 시설 여건을 최종 점검하는 시연(simulation) 단계에 와 있다.

대학의 전형제도가 더 이상 일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걸림돌이 아니라 제7차 교육과정의 정착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고, 교육당국과 고등학교, 대학 관계자가 협력해 나가야 할 때이다.

---

---

# 토 문

---

---

〈토론 II-1〉

2005학년도 대입전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과제

박 홍 기

(대한매일 사회교육팀 차장)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전형은 뿔래야 뿔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고교에서 배운 교육과정이 대입에서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대입에 고교의 교육과정이 종속돼 대입을 위한 교육과정이라는 자조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일응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05학년도에 새로 도입되는 대입제도 역시 고교 교육과정에 의거해 마련됐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7차 교육과정에 맞춰 2005학년도 대입제도가 만들어졌다.

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30일 고시돼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 현재 고교 1학년까지 적용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은 이론적으로 흔히 ‘가장 이상적인 교육과정’ 이라고 일컬어진다. 교과서 중심에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바뀐데다 공급자 위주에서 학생 즉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생의 소질과 적성, 창의성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초등학교 1학년~고교 1학년까지의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편성, 고교 2·3학년 학생들의 선택 중심교육과정 도입, 개인차에 따라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재량 활동의 신설·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2005학년도 대입과 직결되는 부분은 당연히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함께 선택중심의 교육과정이다.

## 제7차 교육과정과 대입 전형

현재 고교는 어수선하다. 일선 고교는 지난 8월말 발표된 대학별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방식에 따라 교육과정을 짜고 교과서 주문을 마쳤다.그런데도 앞으로 학생들이 선택교과를 어떻게 변경할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2005학년도 대입에서는 전체 대학의 44.1%인 119개교가 ‘3+1’ 체제로 수능 영역을 반영한다. 37%인 100개교는 ‘2+1’ 체제를 쓴다. 정시모집을 기준으로하면 대부분의 대학들은 언어·외국어·수리영역 중에서 2~3개 영역과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중 1개 영역을 선택, 모두 3~4개 영역으로 전형하는 셈이다. 또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우, 고교 1학년때 배우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정시모집에서 절반이 넘는 103개교가 전교과목의 성적을 요구하고 있다. 고교 2·3학년때의 선택교육과정 성적도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을 비중있게 취급,학생부 성적 관리도 중요해졌다.

실제 2005학년도 대입 체제는 새로운 입시체제이다. 대학마다 전형자료 활용계획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많이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올해 치르는 2003학년도의 기본틀을 최대한 유지해 큰 차이는 없다. 수시 1·2학기 모집이나 정시모집의 골격도 현행과 같다. 논술·면접·추천서 반영 등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수능활용 영역이 대학별·모집단위별로 다르고 지금보다 1~2개 영역이 적게 반영되지만 대신 학생부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고교 1학년생들은 학교 공부와 수능시험 가운데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문제는 이같은 대입제도에 일선 고교와 학생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서울의 J고교 교무부장은 “현재의 교육과정은 6차와 7차 교육과정 중간단계”라고 전제, “7차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학생중심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까마득하다.”고 말했다. 일선 고교가 7차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 학생들도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미흡하다. 학생들은 대입에 연관,선배나 교사들의 조언에 따라 교과를 선택하고 있다.

최근 전체 고교의 선택과목 교과서 주문을 마감한 결과, 심화선택과목은 과목수가 53개로 다양해졌으나 여전히 수능출제 가능성이나 상대적으로 쉬워 고득점 가능성이 높은 과목,입시에서 대학이 전공에 따라 학생부 성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과목, 단위수가 높은 과목 위주의 선택이 뚜렷했다. 7차 교육과정의 취지가 아직은 현장에서 충분히 정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어 심화선택과목의 경우, ‘문학’ 상·하 과목이 각각 38.1%(41만여권)와 36.8%(36만여권)로 절대다수였다. 다음이 ‘독서’ (10.8%)였으며 ‘작문’ (7.9%), ‘문법’ (3.3%), ‘화법’ (2.9%)등의 선택은 미미했다. 논술에 도움이 될 만한 교과를 선택한 것이다.

사회·국사과목도 마찬가지다. 사회문화’가 26.0%(13만권), ‘한국지리’ (12만7천권)가 25.7%로 과반수를 넘었다. 비교적 쉽다는 판단에서다. ‘경제’ (13.1%), ‘법과 사회’ (10.0%), ‘정치’ (9.8%), ‘세계사’ (8.9%), ‘세계지리’ (5.0%), ‘경제지리’ (1.2%) 등은 상대적으로 선택이 적었다.

과학과목은 물리 I (20.4%),화학 I (23.6%),생물 I (27.0%),지구과학 I (18.5%)등 주요 4과목이 비교적 고르게 선택됐고, 물리II,화학II,생물II,지구과학II 등은 2~3% 썩으로 예상대로 선택이 적었다.

일반선택과목에 포함돼있는 제2외국어의 경우 과목별 격차가 극심했다. 따라

서 교사수급의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일본어 I’ 선택이 무려 66.9%에 달하고 ‘중국어 I’ 이 16.2%인데 비해 ‘독일어 I’ 9.2%, ‘프랑스어 I’ 6.3%, ‘스페인어 I’ 0.9%, ‘러시아어 I’ 0.3%, ‘아랍어 I’ 는 0.002% 등으로 상당수 제2외국어가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교과선택의 편중은 일선 학교의 교사 수급과 연관된다. 현재 일부 고교에서는 교과선택권이 교육청, 학교, 학생에게 나눠져 있는 점을 이용, 학생들이 특이한 과목을 선택했을 때 ‘은연중’에 다른 학생들이 많이 선택한 과목으로 유도해 자연스럽게 폐강하고 있다. 서울의 Y고교는 학생들이 일본어 선택 일색이어서 아예 일본어를 개설하지 않았다. 일본어를 신설하면 독어와 불어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처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 K고교의 교사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싶지만 10명도 안되는 학생들을 위해 교과를 신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솔직히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대에서 내놓은 ‘최소단위 이수제’로 일선 고교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대측에서 보자면 대학에서는 대학 수학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한 학생을 뽑는 것은 선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실정에서는 무리이다.

당시 교육청이나 고교에서는 ‘서울대가 고교의 교육과정을 좌지우지한다.’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서울대는 최소단위이수제를 수정, 당초 130단위에서 120단위로 완화하면서 융통성도 부여했다.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과의 관계를 사실적으로 보여준 단적인 예이다.

일부 주요대학에서도 서울대와 같은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입시관계자들의 말이다. 예컨대 과학탐구의 경우, 물리 I, 생물 I, 화학 I 과 함께



물리Ⅱ를 요구하는 등의 과목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대학들이 과목을 지정하면 7차 교육과정은 경직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대학측에 무조건 7차 교육과정에 따라 대입을 운영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 2005학년도 대입은 7차 교육과정의 정착에 필요한 과도기적 성격

현재 1997년 7차 교육과정의 고시때 밝힌 것처럼 7차 교육과정이 일선에서 제대로 정착되고 있다고 보는 고교 교사들은 거의 없다. 이상적인 교육과정에 도달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따라서 2005학년도 대입과 7차 교육과정과의 절충형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대학들도 고교생들의 선호도를 파악, 입시에 반영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고교도 대학의 자율적인 선발권에 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과정에 대비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현실을 감안한 절충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수의 대학들을 제외한 모든 대학들은 수험생들이 이수한 모든 영역의 교과를 반영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특정과목의 선택은 없다는 것이다. 교과 선택에 있어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대학의 의도이다.

결국 7차 교육과정이 제대로 반영된 2005학년도의 대입제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려면 첫째,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돼야 한다.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이 필수적이다. 그렇다고 무제한적 보장도 불가능하다. 어쨌든 부족한 교원을 충원해야 한다. 예산상 교원의 수급이 어려우면 순회교사를 활성화하거나 인근학교와 연계한 교육과정의 운영도 한 방안이다.

둘째, 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전문 상담교사제가 도입되면 더욱 좋다.

실제 학생들은 자신들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인문계,자연계의 구분이 없다지만 어느 계열을 택해 어떻게 공부를 할지를 모른다. 따라서 학생들은 대학들이 선호하는 세부적인 학과제 보다는 광범위한 학부제를 좋아한다. 교과선택에서 보듯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교사나 선배들을 통해 교과를 골랐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2005학년도에는 현행과 같은 총점제가 아닌 표준점수제가 도입돼 난이도의 높낮이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만큼 예술계통으로 나갈 학생은 불어, 학문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독어를 선택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권장했어야 했다.

결론적으로 대학들은 현 상황에서 7차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2005학년도의 대입 세부계획을 가급적 빨리 발표, 학생들의 혼란을 줄여줘야 한다. 또 고교들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힘들다고 하기에 앞서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알려줘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할 것이다.

또 2005학년도부터는 대입의 전형이 다양화되는 만큼 사교육 시장의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대교협이나 한국교육개발원 등 공적인 기관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및 학업 컨설팅을 위한 체제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토론 Ⅱ-2〉

2005학년도 대입제도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과제에 대한 토론

황 인 표

(보성고 교사, 교총 전문위원)

I. 서론

우리 나라와 같이 대학 입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학 입학 전형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어떤 것으로도 대변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대학의 입학 전형은 최소한의 몇 가지 기본적 관점에 입각하여야 한다. 즉, ‘선발 위주’로 할 것인가, ‘교육 정상화’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학력 위주’로 할 것인가,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본 토론자는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잘 아시다시피 제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2001년 12월 갑작스럽게 2005년 수능능력시험 개선 안(案)이 발표되었다. 그 의도는 한 마디로 제 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교착을 위한 기도였다. 그러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후속 논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는 점과 대학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입학 전형 안을 마련하여 반영할 수 있다 라는 점을 밝히

면서 공을 대학으로 넘겼다. 차후에 더 논하겠지만,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넓게는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취지는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보다 많은 문제가 과생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고교 교육의 입시 종속화와 교육과정의 비정상적 운영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1)</sup>. 그러한 염려들은 하나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각 대학들이 그 수능 안에 근거하여 입학전형 안을 발표하거나 마련하고 있고, 각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수학능력 시험에 나오느냐 아니냐를 중요한 근거로 삼고 편성하고 있다. 현재 각급 학교들은 6.1차-6.5차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는 현실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한 축인 선택 과목제도의 정신을 구축한다는 명분 하에 서둘러 발표된 수능 개선 안은 비록, 지금 단계에서 하나의 ‘안(案)’으로 발표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미치는 고교 교육과정에서의 심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졸속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교육적 철학이 결여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sup>2)</sup>.

이상갑 전 학교 정책 실장님(이하 발표자)의 발표에서도 그러한 염려를 여러 곳에 피력해 놓고 있다. 특히,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 제도- 2005 대학 입시에 대한 문제점 및 현장의 요구-’라는 항목에서 상당한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입시제도(단, ‘교과별 필요 최소 이수 단위 수’에 관해서는 본 토론자는 약간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따라서, 차후에 구체적으로 언

---

1) 단적인 사례가 지난 8월 서울대학교 입시 발표의 경우다. 서울대의 2005년 입시 안이 몇 가지 후속 논의를 야기하게되고 최종 발표를 연기하자, 각 고등학교 교육과정 담당자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가 그 결과에 따라 교육과정 안을 확정하였던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2) 실제로 2001년 수능 개선 안 공청회에 참가했던 교사들의 한결 같은 증언은 참가자들의 이론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수용하는 선에서 만들어 놓은 ‘짜집기 안’이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급하는 것으로 하겠다) 나. 학교의 여건과 실정을 고려한 입시제도(이 부분에서도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일부 논거를 제외한 입장에서) 등에서는 현실적이고도 긍정적인 제안이 많이 들어 있다. 본 토론자로서도 그러한 점에는 이의가 없으며, 대학 당국들이 차후 입학 전형 안(案)을 만드는데 깊이 참고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만, 발표자의 글 속에서 먼저 지적하고 넘어 가야할 것이 있다. 발표자는 제 7차 교육과정이 입시 위주의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의도로 출발하였다고 하고 그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사항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그칠 수 없다. 비록, 본 토론이 제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문제가 이 번 7차 교육과정을 시행하려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약간의 시간 할애는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토론자는 2005년 입학 전형 안에 관련한 내용 중에서 수학능력 시험 안을 중심으로 보면서 이에 따른 관련 내용을 주로 언급하고자 한다. 이것은 여전히 많은 대학이 수학능력 시험을 대학 전형의 중요한 자료로 삼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수학능력 시험 중심으로 편성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 II. 2005학년도 대입 전형(수학능력 시험) 안의 제 문제

### 1. 기본적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철학의 부재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 안을 보면, ‘고교 교육 정상화’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

“이번 개편은 내년 2002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신입생(현 중학교 3학년)들이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수업을 받게 되므로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새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수리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대학에서의 수학능력 측정에 필요하고 또 지필시험에 의한 평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선택과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위 글의 발표문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제7차 교육과정의 확인 고착과 대학의 편의적 선발 시험이 2005년도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 고등학교 현장은 대학을 위한 징검다리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고등학생으로서의 필요하고도 적합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 측정에 필요하고 또 지필 시험에 의한 평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현장에서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고등학교 교육의 모든 것이 대학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꼴이다. 발표자의 글에서는 ‘대입 전형 안들이 제 7차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일선학교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고심의 흔적이 역력하다’고 하면서 ‘대학 전형 방안에 따라 맞춤형 학습’을 요구하고 있다. 자칫, 고등학교는 독자적인 교육 목표나 정상적인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과목을 실제로 설치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발표자도 그러한 우려를 일부 표현하고 있다. 과연, 대학들이 7차 교육과정에 맞추어 전형 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제 7차 교육과정은 진정으로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것인가?

둘째, 대학들로 하여금 다양한 전형 자료를 개발하라고 하고선 고교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선발에 임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체제가 이 번 수능 안이다. 만약, 의도한 대로 맞춤형 교육(다양한 전형을 의도한)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대학을 목표로 준비했던 학생이 실패할 경우 또 다른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근본적으로 수학 능력 시험이 다양한 전형 방식 중의 하나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이다. 문제는 그러한 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학 능력 시험이 다양한 선발을 위한 하나의 전형 자료일 뿐이라면, 그 기능과 역할 비중이 줄어들어야 한다. 그 역할은 본 필자가 누차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격제화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선발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성취도’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필요한 학문적 요구는 대학이 개발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성취도 측정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것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번 수능 안은 그러한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대학의 입시 발표를 통해서 과목을 편성하고 대학의 입맛에 맞추는 꼴이 되어야 한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학교 교육을 통하여 적절한 영역에서 기본 소양을 갖춘 동량을 키워놓으면, 그 중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해 가는 일은 대학이 할 일이다. 그러나, 이 번 수능 안은 대학이 이런 아이를 키우라고 하고 그리고 그러한 아이들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고등학교가 ‘대학의 하청 업자’가 되는 것이다.

## 2. 2005학년도 수학 능력시험 안에 대한 개선 제언

따라서, 본 장에서는 ‘2005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 개선 안’에 대한 ‘개선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수능안에 대해서는 발표자의 [참고자료] 참조)

### 가. 사회 탐구, 과학 탐구에서의 과목 배정의 문제(학생의 선택 편식의 문제)

이번 수능 안은 너무도 무책임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그 틀에 의해서 각 대학의 입학 전형 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 심화 탐구 영역에서의 4과목, 과학 심화 탐구 영역에서의 4과목을 무작위로 선택하게 하는 것은 일부 교육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기초 과목을 완전히 죽일 가능성이 있는 무책임한 ‘선택 신화’이다.

본 필자가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제 7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선택 과목제에 있다. 선택을 하면, 좀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것이라는 경제 논리가 문제이다. 학생들은 선택 능력이 있고 그러할 때, 교과 담당 교사들은 경쟁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놀이’가 아니다. 경제 영역을 비롯한 일부 영역에서는 선택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교육은 다르다. 교육은 ‘가르쳐져야 하고 배워야만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점은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어긋나지 않는다. 내용이나 방식은 변할 수 있어도 교육은 배우고 가르친다는 사실에 변화는 없다. 이 점을 당국자들과 대학 당국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에서의 ‘선택’은 좀 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발표자도 이러한 점을 적절한 방법으로 피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택은 학생의 몫으로 되어 있다. 본 토론자의 견해로는 교육에서 선택이 적용되어야 할 영역은 ‘학교 선택’이라는 방법이(그래서 다양한 학교의 육성이) 교육에서의 선택 본질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이 번 수능 개선 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선택 인식의 고착화와 왜곡된 선택의 양산이다.

먼저, 왜곡된 선택의 양산이라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

이 번 수능능력 시험 안을 보면, 사회 탐구 영역은 사회 관련 심화 탐구 11



개 과목에서 4개 과목만을 선택하면 된다고 되어 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점수따기 쉬운 과목과 재밌다고 소문나거나 내신 점수 잘 주는 과목으로 몰릴 것은 명약 관화하다<sup>3)</sup>. 제 7차 교육과정의 정신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할지 모른다. 점수 잘 주는 교사에게나 점수따기 쉬운 과목(교과 내용이 쉬운 과목)에 모이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학생들이 재미있어서 모이는 것도 수요자 중심 교육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학생들의 이성적 선택을 바라는 그 신뢰를 교육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너무도 당연한 결과를 굳이 시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등학생들보다 더 이성적이라고 하는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선택 상황을 한 번 체크해 보자. 실제로 교양과목 선택을 보면 그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다. 점수 잘 주고 보고서 없는 과목의 강좌는 넘쳐나고 까다로운 과목의 강좌는 공허한 메아리의 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유사한 경험은 누구

---

3) 이러한 논란의 가운데, '교과목별 최소 이수 단위제'라는 것이 있었다. 본 토론자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와 안정성, 그리고 학생들의 과목 편식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 의미를 새롭게 평가하고자 한다. 다만, 서울대 안은 발표의 취지에서 본다면, 너무 미약한 처방이다. 서울대의 발표문(2002. 8. 2일자)을 보면, 교과목별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교과목별 필요최소 이수단위를 제시하고 있다. "선택형 교육과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나친 과목 편식 현상이 발생하는 등 기초학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 학문 영역간의 전문화와 동시에 통합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교육에 필요한 폭넓은 기초 소양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열거하고 있다. 그 인식에 있어서 본 토론자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다. 다만, 발표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교과목별은 사회·과학 탐구 영역별이라는 점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 탐구 영역은 크게 4가지 교과 군- 윤리, 지리, 국사, 사회-으로 되어 있고 각 교과는 그 안에 다양한 과목들이 들어 있다. 예를 들어 국사 영역은 국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의 과목이 열거된다. 다음으로, 영역별 반영 방안에서 '사회 탐구 영역'은 "국사+ 3과목"(필요 최소 이수 단위 22단위)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사 과목을 고정한 것 외에는 나머지 과목은 무작위로 선택할 수 있어서 여전히 학생들의 편식을 막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과학 탐구 영역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것은 본문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에게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널리 보도된 바와 같이 꼭 있어야 할 과목이나 학문 분야가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학생들이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sup>4)</sup>. 그러므로 그러한 무책임한 수능 과목 나열을 통한 선택은 절대 피해야 한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선택을 유도하고 선정하는 문제는 대학이 정할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대학에 맡기는 것도 너무도 무책임한 행동이다. 더구나, 대학들은 손쉽게 우수한 인력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교육 전체라든지 고교 교육의 정상화라든지 하는 교육적 관점의 배려는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수능 선택 제도의 고착화의 문제다. 이번 수능 개선 안이라는 이름의 수능 개선 안의 가장 큰 문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핵심 문제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과목 선택제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실제로 보도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이 특정 과목을 시험 보겠다고 하면, 그 과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강제를 강요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한다는, 그리고 그것이 교육적이라고 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시험을 보게 해야한다는 방법으로 선택제를 고착시키려는 다소 치졸하기까지 한 발상이다.

이러한 의도와 문제를 포태하고 있는 개선 수능 안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발표된 안을 전면 부정한다기 보다 기본적으로 문제되는 점을 개선하여 좀 더 실현성 있고 의미 있는 수능 안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 1) 과학 탐구 영역

먼저 과학 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을 기본 과목에 의한 영역별 제한을 하여야 한다. 선택의 폭을 임의로 하지 말고 교육적, 현실적 관점에서 상당한 제한

---

4) 2002년 3월 9일자 동아일보 A30 면에 그 실상의 단면이 보도되어 있다. 그 외의 많은 신문들도 그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고, 현장의 사실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수능 안과는 달리 과거에 과학 탐구 영역을 모두 배우면서 시험만을 특정 과목을 선택해서 학력 고사에 응시하게 한 사례가 있었다. 그 때 학교에서는 모든 것을 배우고 시험을 선택해서 보게 한 결과 학교 밖에서 명확한 선택 차별이 왔다는 것이다<sup>5)</sup>. 그렇다면, 이번 수능 안처럼 학생들의 자율에 맡긴다면, 학생들의 선택은 불을 보듯 흰하다. 그러므로 과학 탐구에서는 기본 영역에 대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4 영역을 고정시키고(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각 I 영역을 필수) 그 위에 자신이 선택한 과목Ⅱ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sup>6)</sup>. 이것은 교육적으로 필요하나 학생들이 기피하는 ‘물리, 화학’ 등의 과목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그런다고 선택의 기본 정신이 어긋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뒤의 안 참조).

## 2) 사회 탐구 영역

다음으로 사회 탐구 영역의 문제도 그 심각성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 그러므로 사회 탐구 영역<sup>7)</sup>에서는 우선, 사회, 지리, 역사, 윤리의 네 영역을 각 각 독

5)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생물 70%, 지구과학 20%, 화학 8%, 물리2% 라는 선택의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정확한 수치 자료는 통계 미비로 처리 못함).

6) 대학은 영역별, 과목 별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과의 지원자에 대해서는 과목 편식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다. 예를 들어, ‘물리’ 과목을 기피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를 반드시 시험 과목으로 포함하게 하여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소 생각할 여지가 많다. 즉, 그러한 방법으로 교육 붕괴를 얼마나 막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7) 사회 탐구 영역에서 11개의 선택 과목군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윤리·도덕과의 경우, 윤리(전통 윤리+ 사상과 윤리)라는 심화 선택 과목은 세 가지 면에서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전통 윤리(4)”와 “윤리와 사상(4)”이라는 독립된 과목을 이수 단위가 작다는 이유로 합하여 하나의 과목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택의 경우의 수를 줄임으로써 타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동시에 이것은 다른 과목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든 문제다. “국사”는 국민 공통 기본 과목이면서 동시에 4단위의 이수 단위를 가지고 있는데 인데 심화 선택 중심의 시험과목에 들어 있다. 또한, 4단위의 이수 단위를 독

립적으로 한 과목씩 묶어서 하나의 틀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한 과목씩을 선택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유용하다. 첫째, 과목 편식을 막을 수 있다. 즉, 교양으로서의 사회적 인식의 틀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것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유도할 수 있다(과학 탐구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sup>8)</sup>.

내용상 불합리가 있으면, 실제적 필요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학회 등의 연구를 통해서 보완이 있어야 한다<sup>9)</sup>.

---

립 과목으로 만들고 있는 것들은 무수하다. 예를 들어, 과학 탐구 과목의 “과목 I”들은 모두 4단위로 되어 있고, 수학의 선택 과목들도 대부분 4단위인데, 독립 과목으로 만들고 있다). 둘째, 도덕·윤리과 교육과정은 애초에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의 연계된 수업을 위해서 과거의 윤리 영역에 포함된 내용을 일반 선택 과목인 시민 윤리와 심화 선택 과목인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라는 영역별 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데, 심화 선택 과목만을 시험 대상으로 함으로써(고교 교육은 시험 과목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건전한 윤리적 시각을 갖게 하는 데 한계를 갖게 하였다. 셋째, 이수 단위로 묶게 되어 다른 여타 과목이 평균 3-4개의 선택 과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하나의 선택 과목을 제시함으로써 동등한 선택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다른 과목 내에도 존재하는 것으로서 교육부의 “심화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선택중심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기초로 위계(位階)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화선택 교과목을 중심으로 평가해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이라는 발표문이 깊이 있는 내용 연구에 의하기보다는 외형적 형식적 틀이고 무지에 의한 틀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사회 탐구 선택 군에서 ‘국사’ 관련 과목은 국사가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사회(10 단위 중 4단위) 단위 속에 있고, 심화 선택 과목에는 없는 것인데, 하나의 독립된 교과로 심화 선택 과목군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래, 국사 관련 심화 선택 과목은 “한국 근·현대사(8)”와 “세계사(8)”로 되어 있다.

8)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원들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상당히 큰 오해라고 할 수 있다. 그 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의 교육적 필요를 보면, 일시적 교사 충원은 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소치라는 생각이다. 교육적 소신을 피력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9)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관련 교과 학회 등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 나. 국, 영, 수 중심의 편성 문제

이번 개선 수능 안의 핵심적 철학 중의 하나는 모든 영역이 학생들의 선택과 대학의 요구에 의한 ‘임의 영역’으로 되어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모든 영역 또는 모든 과목이 동등한 선택의 대상인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실체를 보면, 소위 기본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국, 영, 수 중심의 편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망가뜨릴 수 있는 전형적이고 무책임한 안이다.

그러한 단초들이 가능한 것은 어떤 연유에서인가? 우선, 대학들은 입시 요강으로서 일정한 영역과 과목을 요구할 것이다. 모든 영역이 임의 영역이라고는 하나, 각 대학들은 국·영·수에 해당하는 것을 영역을 필수적으로 요구할 것이 당연하다.

둘째, 국어에 해당하는 언어 영역과 영어에 해당하는 외국어 영역은 교과서의 내용에 얽매이지 않는 범교과적 내용을 출제 영역으로 하고 있다. 학생들은 그 범위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사실은 이미 현행 제도하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는데,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영역들이 그 비중이 낮아지거나 다른 영역을 요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빚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표 참조)

---

교과서를 만들 때, 심화 선택 과목 중심의 수능 안이 편성될 것이라는 사태를 예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완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그 보완안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여전히 그러한 조치를 행하고 있지 않다.

## 다. 심화 선택 과목 중심의 수능 출제의 문제

(기본 공통 과목 교육 정상화 문제 등)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학 능력 시험을 ‘심화 선택 과목’ 중심의 내용 영역으로 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교육부의 안을 존중한다는 전제에 서더라도 그 포섭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통합교과적 출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새 교육과정에서 선택중심교육과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선택 교과목과 관련되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내용은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된다(심화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선택중심교육과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기초로 위계(位階)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화선택 교과목을 중심으로 평가해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게 됨).

이러한 취지에 입각한 수능 개선 안은 내용적 측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반영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다. 사회 탐구 영역에서만 보더라도 지리 과목과 사회 과목은 어느 정도의 위계적 구성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으나, 모든 과목이 위계적 연관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윤리 영역과 국사 영역은 위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역별 분할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들 과목에서의 심화 선택 과목군을 중심으로 한 것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위계적 포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따라서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 영역이 시험의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국민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을 수학 능력 시험에서 배제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다. 교육 인적 자원부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교

과목들을 직접 출제 범위에 포함하게 되면 수험 준비를 위해 고교 2, 3학년에서도 고교 1학년때 배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목들을 반복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크며, 학생들의 수험 준비 교과목 수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국민 공통 기본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수능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가 당착이다. 국민 공통 기본 과목이 출제에 간접적으로 포용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문구를 보면, 국민 공통 영역에 대해서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해칠 것이라는 우려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내용을 보건대 결국 시험에 전혀 내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 교과 과정의 수업이 파행적으로 무시될 것에 대비한 면피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사실이다.

과연,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한 파행적 운영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 국민 공통 기본 교과는 그래도 ‘필수’로 되어 있고, 차후 대학 등이 수시 등에 활용할 자료로 내신 자료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담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선택 과목군은 완전히 심화 선택 군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원래 일반 선택과 연계하여 심화 선택 군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나(필요한 경우, 일반 선택과목을 하지 않고 심화 선택을 바로 이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능이 심화 선택 군으로 편성됨으로써 일반 선택 과목들은 거의 생존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sup>10)</sup>. 특히, 학생들이 불안 심리에 근거해서 수능에 해당하는 여러 과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심화 선택 과목만으로도 충분히 이수

---

10) 그러한 징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 더구나 이미 일반 선택 과목군을 확정 한 지역에서 그것을 취소하고 심화 선택군으로 바꾸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또한, 이미 외형적으로는 다른 표시 과목을 선택하고 내용적으로는 수능 관련 과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형태의 교육적 왜곡이다. 그러므로, 일반 선택군의 과목을 심화 선택의 과목의 일부로 편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그 과목 수는 그리 많지 않다).

단위를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선택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선택 과목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이라면, 이들을 살릴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 중 하나의 안을 제시한다면, 바로 심화 선택 과목 군으로 올려서(따라서, 일반 선택과 심화 선택 과목의 구별을 없애는 것이다) 교육 정상화를 꾀하는 것이다.

## 라. 실업고의 입시 시장화의 문제(‘직업 선택’군의 문제 등)

이번 수능 안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 사회 과학 탐구와 대비한 선택으로 “직업 탐구”영역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지식기반사회에서 직업교육의 중심 축이 고등교육으로 확대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실업계 고교생들의 학습 의욕과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직업탐구 영역 신설이 절실하다는 실업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의 보도 자료는 현실적 요구, 실업계의 자긍심 양양 방안 때문에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또한 나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현장은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실업계 현장을 중심으로 그 동안 실업계 학생들의 진학 현실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 입장을 피력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조치는 기존의 조치와 상치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시각이 지배적이다.

첫째, 직업 탐구 영역의 신설로 이전 보다 오히려 진학의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 동안 실업계 진학자에게는 동일계 우선 전형으로 내신 성적만으로도 각종 전문대학교와 4년제 산업대학교를 진학할 수 있었다. 이 제도는 실업계 학생들의 내신 성적만으로 전형을 하기 때문에 학교간의 경쟁 없이 각 학교 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은 누구나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이 번 직업 탐구 영역의 도입이 이러한 기존의 제도를 철폐하는 전제 위에서 공개 경쟁 시험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실업계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차원에서는 기존의 우선 전형제를 유지하면서 보완적으로 수능을 통한 기회 부여의 효과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동일계 진학자 우선 전형제도를 존치할 것인가의 문제와 수능 실시와 기존 제도의 융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둘째, 직업 탐구 영역의 도입으로 실업계 마저 특성을 상실한 입시 시장화할 우려가 있다.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동일계 경쟁 시험을 도입하는 것은 실업계 자체의 경쟁이라고는 하나 실업계 수능이 실시되면, 수험생 각자는 점수를 올리기 위한 국, 영, 수 중심의 과외나 보충이 이루어질 것이 명약관화하고, 학교로서는 같은 실업계 고등학교 내에서도 진학률이 신입생 유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충 수업을 해야하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 그 결과는 실업계 마저 입시 시장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의 관련학과들이 과연 실업계 수능시험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할 지 도 의문이며, 학생들이 대학 진학 후 그 과정을 따라 갈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마저도 있다.

셋째, 직업 탐구 군의 시험 대상 교과목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 제7차 교육과정의 실업계 전문 교과는 5개 영역(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 244과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제시된

17개 교과목은 어떤 근거로(예를 들어, 관련 학회들의 전문적 연구 결과에 의한 것인지 등)설정하였는지가 명백하지가 않다<sup>11)</sup>. 둘째, 가사·실업 군에 관해서는 13개 선택 과목군에 3개의 선택 과목을 넣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등 과목 편차가 있다. 셋째, 특정 교과 영역에 있어서도 성격이 다른 학과들을 반영하는 과목 설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업에 관한 교과에서는 농업 이해와 농업 기초 기술이라는 과목을 설정하고 있는데, 축산이나 조경과 등의 학과생들에 대한 배려가 없거나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표 2참조>

〈 표2 〉 직업탐구영역의 출제범위에 직접 포함되는 교과목

선택 과목 (택1)	선택 과목 (택2)
농업정보관리, 정보기술기초, 컴퓨터일반, 수산해운정보처리 등 4과목 중 택1	농업이해, 농업기초기술, 공업입문, 기초제도, 상업경제, 회계원리, 해양일반, 수산일반, 해사일반, 인간발달, 식품과영양, 디자인일반, 프로그래밍 등 13과목 중 택2

### Ⅲ. 현실적 대안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사실들은 2005년 수학능력 시험안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여야할 많은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문제를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어 기술하였다. 아직 많은 논의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면에서 논의된 수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1) 물론, 과목 군의 특성을 추론해 보건대, 기초 과목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평가 영역		출제 범위에 직접 포함되는 교과목	개선안
언어		현행과 동일 (국어교육의 목표를 중심으로 한 시험으로서 특정한 교과목을 상정하지 않으며 범교과적인 주제와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	문법(예시) 등 일부를 제외한 현행 방안
외국어 (영어)		현행과 동일 (영어교육의 목표를 중심으로 한 시험으로서 특정한 교과목을 상정하지 않으며 범교과적인 주제와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	동일
수리	선택	'가'형 수학 I + 수학 II +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 3개 교과목 중 택1)	동일
		'나'형 수학 I	동일
사회/ 과학/ 직업 탐구	선택	사회탐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근·현대사, 국사, 세계사, 법과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윤리(윤리와사상 + 전통윤리) 등 11개 교과목 중 택4	지리(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중1), 국사(국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중1) 사회(법과사회, 정치,경제,사회·문화 중1) 윤리(시민윤리,윤리와사상,전통윤리 중1)
	탐구	과학탐구 물리, 물리II, 화학, 화학II, 생물, 생물II, 지구과학, 지구과학II 등 8개 교과목 중 택4	물리 I, 생물 I, 화학 I, 지학 I + II영역 한 과목
	탐구	직업탐구 17개 교과목 중 택 3 (표2 참조)	위 항목에서 소개한 방식
제2외국어/ 한문		제2외국어 I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7개 교과목 및 한문 등 총 8개 교과목 중 택1	

〈토론 Ⅱ-3〉

2005학년도 대입 전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과제

김진기

(전북대학교 교무연구처장)

일반적인 2005학년도 대학입학제도는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방향에서 그 기본 안이 수립되었다. 금년도 2002년부터 적용된 교육과정은 근본적으로 절대적인 진리를 교육내용으로 삼고자 하는 향존주의 교육철학과 상대적인 진리관에 의하여 경험과 적응능력을 강조하는 경험중심 교육철학이 동시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는 국민공통기본교과와 선택교과의 형태로 구성되어 두 가지의 교육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각 대학에서 계획하는 대학입학제도도 더 다양하고 개별화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표자께서는 각 대학의 입학전형방법과 교육현장의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2005학년도 대입 제도와 관련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의 과제를 타당하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동시에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그 대안도 제시하였다. 발표자의 문제제기와 그 개선 방안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 입학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2005학년도 입시 방안에 대해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구체적인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여 토론의 여지를 열어 놓고자 한다.

첫째 대부분의 대학이 5개 수능영역 중 3~4 개를 반영할 계획이지만 이른바 경쟁이 심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은 5개 영역 전부를 반영하는 이른바 3+2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방 국립대학은 2+1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지방국립 대학을 중심으로 한 많은 대학들은 학생의 과목 선택에 중심을 둔 7차 교육과정에 적합한 대학입학 제도를 유도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권장 사항으로 수능영역의 선택적 축소를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수능 영역의 산술적인 축소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이미 대학입학학력고사제도에서 수학능력시험으로 개편되면서 수험생들이 선택하여야 하는 과목은 어느 정도 축소되었음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이 제시한 2+1 방안은 인문계의 경우 수리영역이 빠지며, 자연계의 경우 언어영역이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인문계 전공에서 수리영역이 대학수학능력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동시에 자연계 전공에서 언어영역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라는 질문에 자조적인 의문에 휩싸임을 부정할 수 없다. 어느 국가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언어영역이나 수리영역이 삭제된다는 것인가 그 유례를 찾기가 어렵다. 학생의 선택적 교육과정을 강조한 나머지 지나친 산술적인 수학능력시험의 축소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

둘째, 학생부의 반영계획 중 학년별 과목의 반영 비중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103개의 대학에서 고교 1학년까지 배우는 국민공통 기본교과의 10개 과목을 모두 반영하며, 반면에 2·3학년에서 다루는 일반선택과목이나 심화선택과목은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점은 종전의 학년별 반영 비중, 즉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 식과 역조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점도 기술적으로 잘 대처하여야 할 문제이다. 더욱 더 2·3학년 과목은 선별적으로 반영됨과 비교할 때 1학년 과목은 거의 전부가 반영되는 불균형의 문제도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셋째, 학생부의 반영에서 국민공통기본교과 외에 일반선택과목이나 심화선택

과목에서 서울대처럼 이수단위를 지정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지방국립대학처럼 몇 개 교과 내에서 몇 개 과목 수만을 지정하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 같은 교과 내에서도 이수 단위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나 정확한 안내가 뒤따라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학능력시험의 관리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2005학년도 대입제도는 2004학년도 대학입시와 비교할 때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훨씬 많아져 시험지 묶음작업이나 관리와 고사실 배치 문제 등 실시상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이 예상되고 있어 대단히 염려스럽다 할 것이다. 또한 학생부 성적 반영에서 많은 변화와 대학별 개별성과 독창성이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문제점을 예상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공청회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